

< 1월 12일 >

- 2024년 1월 12일

- 1월 12일

- 1월 12일

- 1월 12일

-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

-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

< 1월 12일 >

> 1월 12일 <

추진위원회 회원 명단

8·10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순서

사 회 : 권 오 원(추진위 실무소위원장)

고문

전성천 박사 (성남교회 원로목사, 당시 대책위 고문)

이용상 선생 (독립운동가, 전 성남문화원 원장)

공동대표

김준기 교수 (전 성남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성남연구」 발행인)

이해학 목사 (주민교회 목사)

집행위원장

하동근 소장 (성남문화연구소 소장)

추진위원(가나다 순)

김성태 회장 (성남예총 회장)

김수용 본부장(외산 담배 추방 시민 운동 본부 본부장)

김임평 선생 (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 김 철 선생 (당시 구속자)

남선우 원장 (성남문화원 원장)

박명숙 선생 (니브시고 대표)

신상진 원장 (고도제한해제 범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연숙 대표 (성남 여성의 전화 대표)

신영수 이사 (현대건설 상무, 「전 성남의 역사현실과 시민의식」 편집인)

윤범식 기자 (전국매일신문 부국장)

전보삼 교수 (신구대학 교수, 성남포럼 대표)

전성배 회장 (모란 상인회 회장)

조영효 교수 (성남시민모임 공동대표)

한춘섭 선생 (전 성남시사 편집위원, 시조시인)

✓홍승범 선생 (당시 입건자)

실무소위

권오원(성남문화연구소), 고희영(성남문화연구소), 국중범(성남문화연구소)

오익호(고도제한해제 범시민 대책위), 이상훈(청년대학)

1. 개회

1. 국민의례

1. 경과보고

1. 기념사

1. 축 사

1. 심포지엄

- 사 회 : 하동근(집행위원장)

- 발 제 자

· 김 동 춘 : 현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 김 준 기 : 전 성남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전 성남연구 발행인
현 한국농업전문대 초빙교수

· 박 태 순 : 소설가
당시 월간중앙 르포 기사 작성 기자

- 패 널

· 김 해 성 : 목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소장

· 윤 범 식 : 전국매일신문 부국장

· 한 춘 섭 : 전 성남시사 편집위원, 전 향토문화 연구소 소장
시조작가

1. 8·10 이름 선포

1. 광 고

1. 폐 회

8·10 사건을 풀어헤치는 일들의 의미

하 동 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40여 일간의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다.

“이제 와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들춰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등의 의구심 섞인 시각들은 차라리 받아들이기 쉬웠다. 오히려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의 사실을 재구성할 자료들이 분실되거나 아예 그 동안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들이 ‘보존연한’이라는 물 역사적 근거로 인하여 행정 처리(폐기)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도 새롭게 드러나는 증언이나 자료들이 우리를 긴장시켰다.

새로운 자료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사건의 담론과 현실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재해석하려는 몇 번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市史를 위한 사건의 재구성 작업이나, 시민단체들의 사건의 재해석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생산된 담론과 당시의 현실(불과 3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과의 사이에는 언어담론이 갖는 일반적 한계(추상화, 관념화 등)를 뛰어넘는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간의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사건 발생의 정치 경제적 조건’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연관성상에서 사건의 주체세력을 역으로 추정해내는 등 거시담론 위주이거나, 분석 패러다임에 기계론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토지불하가격인하, 각종 세금 면제 혹은 유예 등의 주장 내용과, 대책위, 투쟁위의 인적 구성, 등등의 파편적인 언술에서 사건의 성격을 폄하 혹은 왜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철거민 대표성의 언술이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실의 상

황 조건은 철거민들이 그들 상황의 변혁이나 각종 요구를 언어나, 조직이나, 투쟁의 전술을 생각조차 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시사 편찬당시의 시 행정부의 시각은 시위의 폭력적 양상과 정부의 요구 조건에 대한 무조건적 승낙으로 단순화하여 이 사건을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하여 또한 성격규명에 있어서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두 시각 모두 당시(69년 말에서 사건 당시까지의) 생활환경의 무모한 절박성과 ‘절대적 생존권’(요즘에는 기득권 세력에서도 생존권적 위기를 이유로 시위를 조직하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절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기로 한다) 박탈의 현실을 과소평가 혹은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루에 십 수명씩 배고파 죽는 현실, 죽은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는 현실, 아니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현실 - 즉 말이 안 되는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만난 당시 구속자 김 선생은 산모가 아이를 잡아먹은 집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2년여를 견뎌내야 하는 절박함.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은 이 나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핑크 빛 청사진만 당시의 언론은 자랑하고 있었다.(당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71년 7월 16일?)는 성남 신도시 계획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기획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8·10 사건은 69년부터 시작된 사건이야” 라고 말하는 당시 대책위원회 고문인 전성천 박사님의 의견은 사건을 보는 시점과 현실의 거리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약컨대 사건 당시의 대단지 사람들의 대척점에 있었던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폭력을 이제까지의 담론들이 개발독재가 갖는 담론들 뒤에 감춰지거나 과소평가 되어온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폭력이라 하는 근거는 ‘일단의 광주대단지 주택단지 경영사업’이라는 계획이 갖는 계획상의 미비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십 수명이 굶어죽고, 생존환경의 극단적인 현실에 눈감아 버린 소극적인 폭력과, 사건 당시까지 쓰기로 계획된 예산의 14% 미만만을 집행함으로써(서울시는 경영사업을 통하여 충분한 집행 예산을 확보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생존을 위한 예산의 85%를 집행하지 않았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신화적으로 악화시켰다는 적극적인 측면에 있다.

광주민중항쟁 때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규 군인들이 정신병적인 학살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폭력은 많은 대단지 사람들을 굶어죽게 만들었다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5시간의 대치상황에서 그리 쉽사리 모든 요구 조건을 무조건 수용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정 폭력적 사실들 때문에 몇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즉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한국전쟁 때의 보도연맹 사건처럼 북한 동조세력이나 범죄세력을 한 지역에 몰아 넣고 관리하려 했다는 보도연맹 식 음모론(몇 가지 논문과 국회의 질의 응답이 있었으나 아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혹은 호남인들을 한 지역에 몰아놓고 차별했다는 호남인 차별 음모론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말 그대로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들은 사건 당시의 광주대단지 사람들이 폭도인지, 혹은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이 폭도인지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이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얻고자 했던 목표, 즉 사건의 성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여 그 공공성과 객관성을 얻고, 그리하여 이름 없는 사건에 자랑스런 이름을 시민의 이름으로 부여하기로 한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고 지난한 과정인 것을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더욱 새삼스레 느끼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이 그 이름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적 싸움이 필요로 했는가? 또한 '동학관'이 '갑오농민전쟁'으로 제 이름을 찾는데 반세기 이상이 걸렸고, 식민지라는 특이한 상황이었다 해도 3·1 독립운동은 민족운동으로 제자리 찾는데 25년 이상을 필요로 했다. 4·19 혁명도 혁명→의거→혁명으로 오랜 논의와 파행을 겪어 제 이름을 찾았던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번 사업은 이제 겨우 첫 발자국을 내딛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일이 지역과 역사에 갖는 의의가 어떠한지는 여러 지면을 통하여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여러 가지 흠어지고 파손된 자료들을 수집하기에는 1년의 세월도 모자랄 지경이다.

또한 아직 사건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어서 얼굴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당시의 핵심 인물들의 등장도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당시의 감성을 증언으로 채록하는 등의 자료는 그 분들의 연세를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도 세 분의 발제자들이 발제문을 써 주신데 대하여 성남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동춘 교수께서는 일반적 사회운동의 분석 패러다임과 도시빈민운동의 틀과 8·10 사건의 비교하는 방식을 통하여 최초로 이 사건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의의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주 빈곤한 자료밖에 전해주지 못했지만 교수님 스스로 자료를 보완하여 귀한 글을 남겨 주셨다. 그러나 적용된 패러다임의 현실적실성 등의 문제는 토론의 자료로 남는다고 하겠다.

소설가 박태순 선생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중요한 르포기사를 남겨 주신 분이시다.

이분의 자료가 8·10의 중요한 자료임은 다시 말할 바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당시의 감성이 묻어있는 생생한 필치로 사건의 성격분석과 발생원인을 분석해 주셨다. 이러한 감성과 과학적 분석틀이 정확하게 접목될 때 8·10의 성격규명이 이뤄질 수 있겠다.

김준기 교수는 지역에서 최초로 8·10의 과학적 담론화를 시도하신 분이다. 8·10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화재로 분실하여 개인과 지역에 안타까움이 크지만 이번에 그 동안의 연구를 모아서 발제문을 내셨다. 이제 지역적 담론에서 공공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패널로 참여하시는 한춘섭 선생은 시사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뿐 아니라 늘 이 사건의 자료수집과 사건규명에 애쓰셨던 분이시므로 市史적 시각을 대표하실 것으로 기대된다.

윤법식 기자는 오랜 기간을 지역기자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감성을 기사화 했던 분으로 이번 토론에서 지역성의 시각과 8·10 이후사의 시각을 대변하실 것으로 기대된다.

71년 광주대단지 8·10 항거의 재조명

김 동 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해성 목사는 지역의 노동·빈민운동에서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운동의 핵심에 계신 분으로 운동의 관점에서 8·10을 해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의 심포지엄이지만 당시의 말도 못하고 굶어 죽어간 이들과 감옥에 끌려가 간첩으로 몰리며 고문당한 이들에게 작지만 명예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고, 범죄의 도시, 포악한 도시로 이미지화 된 도시를 살아가는 성남사람들에게 자랑스런 역사를 지닌 시민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30년이 넘는 성남시의 역사에 도시 정체성의 시초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8·10을 재해석하고 기념하고 살아있는 역사로 성남의 행정과 성남사람들의 모든 일상에 자리잡게 하는 일은 멀고 지난한 일이 될 것임을 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자료집은 토론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안된 자료 등을 모아 다시 발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이 행사 이후에는 추진위의 임시성을 탈피하고 기념사업회 등의 새로운 조직이 영속성을 가지고 이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일에는 순수 민간뿐만 아니라 시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과 여론이 이 사업을 성남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기를 기대한다.

1. 머리말

70년대 중요 사건이나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광주대단지 사건'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박 정권이 언론 보도를 통제하였으며 여타 매체나 공식 교육과정에서 이 사건이 소개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70년대를 살았던 동시대인 중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이후 세대들은 더욱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 언론들은 난동, 폭동 등의 기호를 의미화(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동은 주변인들의 의미들의 코드로 점점 가학적으로 이미지 악화가 재생산되었다.¹⁾ 특히 이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남 주민들의 집합적인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오히려 성남주민들은 이러한 경험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은 잊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후 30년 동안 지속된 무허가 정착지의 철거, 정비 정책 과정에서나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빈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첫 포문을 열었다.

그 동안 한국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책은 빈민들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해 주려는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직 도시 미관이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만 서서 건설업자들이나 투기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생자본가들의 이익만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특히 제3세계 공업화가 제대로 진척되기 전에 과잉 도시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개발독재 체제는 도시빈민들의 요구를 억누르고, 자본의 재생산에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조화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도심에서의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와 주변에서의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으로 귀결되어 빈민의 일자리 및 생존 문제나 주거 제를 새로운 형태로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

1) 하동근, "8.10 들여다 보기"

를 초래하게 된다.

60년대부터 지속된 도시공간 재구조화 작업은 이러한 저항을 물리치고 결국 도시를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도시 빈민들의 처절한 고통이 깔려 있었으며 오늘의 산적한 도시 주거 문제, 도시 환경 문제 등을 낳은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저항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니며, 오늘 도심의 집 값 상승으로 계속 대도시 주변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빈곤층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다.

2. 사건의 배경과 개요

이 사건은 크게 보아 박 정권의 자본주의적인 근대화, 대자본 육성을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화는 자본주의화에 수반하며,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축약해서 안고 있는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박 정권의 경제 성장 전략은 농촌 회생과 공업 우선, 민중 배제와 대기업 편향적 근대화로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성장의 방식은 군사주의, 권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과나 업적에 치중하며, 구성원의 동의나 합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박 정권의 밀어붙이기 식의 무허가 정착지 조성사업은 그러한 정책의 전형이었다.

60년대 도시빈민의 형성은 바로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산업자본 육성을 위한 노동력 확보 정책의 결과였지만, 정부는 이들을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쓰레기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의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수도권 한 지역으로 집단 이동시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67년 서울시는 23만여 동의 무허가 주택과 127만 명의 주민을 서울시 밖으로 철거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고 경기 광주군 중부면에 인구 50만 명이 살수 있도록 대단지화 해 주택도시로 개발하되 단지 안에 경공업 시설을 갖추어 단지 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단일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용두동, 마장동, 청계천변 등에 거주하던 판자촌 주민 2만 세대를 1969년 5월 2일부터 광주군 중부면 탄리, 단대리로 시 청소차와 군용차로 실어 날랐다. 그 이후 봉천동, 송인동, 창신동, 상·하왕십리 등 무허가 정착지에 밀집 거주하던 빈민들이 내 집도 갖고 일자리도 갖는다는 희망에 부풀어 상하수도, 전기시설은 고사하고 택지조차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광주대단지로 몰려든 것이다.

사건 직전 대단지에는 판자촌 철거민이 2만1천 3백 72가구, 10만여 명, 전매입주자 6천 3백 44가구 1만 4천여 명, 기타 전입한 사람이 2천 9백 5십여 가구의 1만 3천여 명이 살고 있었다. 무계획적으로 입주한 이 지역은 빈곤과 범죄의 온상이었다. 가장 비참한 곳은 언덕바지가 수용지대에 붙은 천막들이었다. 변소의 오물은 넘쳐서 주변에 악취를 풍겼다. 주민들은 끼니도 때울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을 찾아 서울까지 갔다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차비가 더

많이 들어서 갈 수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에는 범죄가 들끓었다. 71년 들어서 6월 이전까지 형사사범 4천 8백 67건 가운데 폭력이 1천 7백 86건, 절도가 927건, 사기가 543건으로 나타났다.²⁾

애초에 서울시는 평당 400원 선에 경기도 땅을 매입하여 철거민을 보내 도시를 만들면 자연히 땅값이 상승하여 서울시는 유보지만 팔더라도 당초의 토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행정지원비를 뽑을 수 있다고 계산하였으며, 인구 50만이 되면 주민들 서로가 주고받아 먹고 살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개발과 건설이 시작되자 토지 브로커들이 날뛰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거대한 폭리를 취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선거바람에 개발용, 토지 붐은 절정에 달했다. 영세민들은 입주권을 사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였다. 서울시는 70년 7월 14일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면서 전매 입주자들은 매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대지를 평당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에 불하하였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렇게 불하한 토지에 1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경기도는 등기도 되지 않은 가옥에 당시 돈으로 1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공장과 주택건설 붐이 시들해졌으며 당연히 일자리도 없어졌다. 돈을 벌다는 소문에 입주권을 산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고 경기가 없어지고 돈을 벌어 집을 짓겠다는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더구나 당국에서 전매한 땅 위에 6월 10일까지 집을 짓지 않으면 불하가 무효가 된다고 하자, 이들 전매자들의 기대는 좌절과 분노로 변하였다. 이들 주민들은 서울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 융자금 일시불 상환 통고를 백지화시킨 싸움에 크게 고무되어 71년 7월 19일 분양지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 대지불하가격 인하(평당 1500원 이하), 2) 불하가격 향후 10년간 연부 상환, 3) 세 세금 5년간 면제, 4)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서에 대해 당국은 회답을 보내지 않았고, 주민들은 대표 217명을 선출하여 대책위를 투쟁위원회로 변경하였다(1971년 8월 3일) 그리고 8월 10일을 최후 결단의 날로 잡고서 그날 11시 성남 출장소 뒷산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8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2,000여 개의 피켓이 어지럽게 출렁거렸다. 10시경에는 엄청난 수의 주민이 모였다. 11시가 넘어서도 양택식 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 사이에서 또 속았다. 내려가자 등의 외침이 들리면서 궐기대회는 난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15만의 광주대단지 인구 중 5만 명이 집결하였으며 70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참가한 군중의 손에는 식칼 곡괭이 몽둥이 등이 쥐어져 있었고 눈망울은 먹이를 찾아 날뛰는 야수처럼 살기가 서려 있었다.³⁾ 단지의 골목에는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대책을 세워달라 등의 벽보가 붙어있었다. 주민들은 생활대책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단을 내리고서 단단히 각오하고 이날 집회에 임

2) 박기정, "광주대단지", 『신동아』, 1971.10

3) 박기정, "광주대단지", 『신동아』, 1971.10

했다고 볼 수 있다.

군중들은 성남출장소로 달려가 부서라, 없애버리라고 고함치며 사무실 안의 책상, 전화기, 캐비닛 등을 마구 내동댕이치면서 부수기 시작하였다. 100여 평의 출장소 건물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군중들은 죽여라 밟아버려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출장소 앞에 세워둔 서울 관 1-356 짐차를 불태운 다음, 출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서울시 과천 광주단지 사업소에 몰려가 기물을 마구 때려부순 후 성냥을 그어 댔으나 비 때문에 사업소 방화는 실패하였다. 이윽고 이들은 지나가던 서울 영 7-4880호, 7-4875 삼륜차와 서울 영 6-206호 시영버스, 경기 자 7-725 트럭 등을 닥치는 대로 탈취해 타고 플래카드를 차에 달고 고함을 지르며 대단지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서, "우리는 몇 끼니를 걸러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팔자 좋게 택시만 타느냐", "죽어도 같이 죽자", "왜 도망가려 하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서 내리게 했다.

분위기는 민란의 조짐으로 발전하였다. 경찰관에게 맞아서 머리가 터졌다는 사람이 "나를 때린 경찰을 죽이겠다"고 식칼을 휘두르며 날뛰기도 했고, 경찰 700명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오히려 흥분하여 "배고픈 우리에게 밥 줄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몽둥이로 막으려 하느냐"고 시영버스에 분승하여 서울로 나가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최루탄과 주민의 투석으로 맞선 데모가 진행되는 도중에 참의를 실은 삼륜차가 지나가자 군중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차에 달려들어 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었다.

오후 2시 반경 데모대는 광주경찰서 성남지서에 몰려가 아우성을 치며 지서를 마구 때려부순 후 지서 앞에 세워둔 경찰 백차 1대를 불질러 버렸고 3시 10분 경에는 수진리 남문 주유소 앞에 세워놓은 경기 관 1-341호 지프를 태웠다. 오후 5시 경 양택식 시장이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뿔뿔이 해산하였다. 양 시장의 제시한 수습 안은 전매입주자의 토지불하 가격은 원 철거 이주자와 같은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 하겠다는 것, 토지취득세 부과를 보류하고,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 실업자를 구제 하겠다는 것이었다.

6시간 지속된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명이 부상하였고, 2천여 만의 재산피해가 났다.

3. 사건의 성격

우선 이 사건은 도시빈민이 주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항거, 혹은 폭동에 가담한 도시빈민은 누구인가?

이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단신, 혹은 가구 이출된 노동 인구로서 대기업의 공장노동자로 취업하지 못하고 영세한 제조업체나 5인 이하 사업장, 건설 일용직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거나 단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자본계적 생산, 유통 서비스 부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활의 안정성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사회의 하층 부문에 취입하여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⁴⁾ 계급적으로 본다면 하층 프티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뿌리 없는 집단인 반 프롤레타리아, 혹은 톰펜 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t)가 대다수라 볼 수 있다. 유럽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집단의 성격을 주목한 맑스와 엥겔스는 이들이 스스로의 이해에 눈을 뜬 단일한 계급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양상을 보면 조직되지 않은 도시 빈민들의 폭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서 폭동이란 도시의 모든 빈민층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여 - 반란이나 소요-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그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이며 전(前)정치적 운동이다. 그러나 도시폭동이 조직성과 목적 의식성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목적과 방향을 견지한 운동(movements)이라기보다는 군중행동(collective behavior)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도시 폭동은 전(前)정치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표방하는 요구가 분명한 정치적 방향으로 결여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다면 좌익에서 우익에 이르기까지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요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틀을 갖고서 우리는 8·10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8·10 사건 당시의 주동자는 성, 연령, 직업을 뛰어넘은 광주대단지 주민 일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주동은 전매입주자라는 설이 정설이다. 즉 입주권 구매로 자가 주택소유의 기대에 부풀었다가 가격이 하락하고, 건축 요구가 강요되고 세금이 요구됨으로써 큰 손실을 입게 된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 항의 운동의 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책위, 투쟁위에 참가한 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나 사건을 주동한 것은 가장 큰 불만과 좌절감을 가진 전매입주자라 추정되고, 가담한 사람들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던 원 철거민, 그리고 세입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여타의 운동에서 그러하듯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권기대회는 이들 주동세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폭동의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익명의 군중들이 사무실을 부수고 불태운 일, 짐차를 불태운 일, 택시 승객을 내리게 한 일, 참의 실은 삼륜차에 달려들어 참의를 모두 먹은 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강한 계급적 적대, 권력에 대한 극도의 분노의 표출에 가까운 것이었다. 특히 가진 자에 대한 막연한 분노, 행정당국의 속임수에 대한 분노 등이 이들의 군중 행동의 주요 동기였다. 즉 분노한 행동은 순수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은 아니며 극심한 가난과 당국의 약속 불이행에서 나온 분노와 절망이 당시 폭동적 사건의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일정한 요구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무정형적 집합행동을 단순히 폭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우선 그

4) 조희연, "증속적 자본주의화와 도시빈민의 경제구조", 『계급과 빈곤』, 한울, 1993.327쪽.

들의 행동은 정부당국의 빈민에 대한 무성의한 대우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하였다. "영세민을 더 이상 착취하지 말라", "일자리를 달라"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대표자인 광주대단지토지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에 계속 진정한 점과 이후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보다 적극적인 요구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목살한 점에 대해 크게 분노 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적극적 항의와 견장을 수 없는 폭동이 결합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항거'(抗拒)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항쟁(抗爭)이라 까지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 정부의 구체적인 탄압행동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며, 또 정치 권력과의 분명한 대치 선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해 확대되기는 했으나 양 시장의 요구 조건 수락과 더불어 곧바로 중단되었고, 군중들의 행동도 다분히 표출적(expressive)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발생한 빈민 항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항거는 주로 부자에 대한 공격의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확고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이념적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 구질서 내에서 비리와 부정을 고친다는 목표에 머물 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대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⁵⁾ 광주대단지 항거의 경우도 군중들의 행동에서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집단이주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당장의 정책에 반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빈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매우 즉자적인 요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항거에 가담한 사람들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공동체성도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군중행동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유된 감정이나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대체로 사회운동은 이러한 무정형의 조직되지 않는 항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⁶⁾ 그것이 조직이나 새로운 이념, 삶의 질서를 창출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단순한 폭동이나 항거로 그칠 것이다.

결국 8·10 당시 항거에 나선 빈민들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항거는 일회성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으며, 그것은 이 운동이 객관화되어 이후의 빈민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른 나라의 주민운동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급 연합적인 군중행동은 지향점이 불분명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나 일시적 흥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 못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항거 역시 다음날 그 이후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몇 몇 생활조건 개선 이외에는 큰 변화

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후의 빈민 운동 과정에 계승되지 못했다. 7) 지역 주민운동을 저항적 주민운동, 참여적 주민운동, 동조적 주민운동, 자조운동으로 분류한다면,⁸⁾ 8·10 항거는 저항적 주민운동의 단계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8·10 항거의 집회는 분명히 의도된 것이었고, 조직적인 것이었으나 집회가 대규모 항거로 발전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즉 항거는 사전에 오랫동안 준비 조직되었다기 보다는 팽배한 분노를 결집하여 폭발시킨 다소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참가자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단순한 참가자에 불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항거 주체들의 조직화의 부재는 이 항거가 이후의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다. 아울러 이 항거가 가진 객관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의 빈민운동 그리고 성남지역의 역사 속에 각인 되지 못한 이유가 된다.

4. 남은 문제들과 빈민 운동

주민들의 폭동성의 항거가 양 시장의 요구조건 수락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KSCF 측의 조사에 의하면 남은 문제는 정당한 분양지조차 불하 받지 못하고 있는 판자촌 세입자들 즉 천막촌 거주자들이었고, 초기에 이주해왔던 철거민들이 생계 대책을 찾을 수 없어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든지, 그 지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당시 가동되던 4개의 공장은 주민의 1%만 취업시킬 따름이어서 자족적인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전매자들의 토지불하가격 인하 요구가 수용되기는 했으나 애초의 철거민들이 이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못했다. 즉 서울시 거주자 중 무허가 정착지 주민의 집단이주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도 못한 채 이들을 또다시 그 지역, 혹은 다른 지역의 무허가 정착지 주민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들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단지 서울외곽으로 빈민을 이동시킨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으며, 빈민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빈민주거 문제는 빈민 생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후자의 대책이 없는 전자의 무리한 대책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자본주의 공업화의 부산물인 이들의 재생산 조건을 국가의 재정능력으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데 출발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당국은 결국 건설업자나 투기꾼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빈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 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이주정책 시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긴장 문제가 제기된 첫 사례였다. 당시 세입자들은 대단지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자신

5) 에릭 홉스봄, 『원초적 반란』, 은누리, 1984, 19쪽.

6) Herbert Blumer, "Social Movements", Stanford Lyman ed, *Social Movements: Critiques, Concepts, case Studies*, NewYork University Press, 1995.

7) "70년대 성남지역운동사" 『성남연구』

8) 강형기, "주민운동론 서설",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사회발전과 사회운동』, 한울, 1990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에 부치는 3개의 질문

박태순 (소설가)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전매입주자들의 소유자의식이 폭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면 세입자들은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일부의 공감대를 제외하고서는 권리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교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빈민선교에 나서게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초 교파적으로 수도권 도시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빈민지대의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서 활동지역을 선정, 책임을 배분한 다음, 신설동 4번지 철거민 이주를 위한 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들을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시청과 교섭하는데도 지원을 하였다. 광주대단지에서는 이해학 전도사가 실무자로 일하게 되어 주민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협동조합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한 8·10 항거는 새로운 빈민운동을 태동시킨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이주정책, 하향식 행정에 제동을 걸고,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부평 공설시장 노점상 500여 명이 인천 북 구청에 몰려가 구청장실과 민원실을 마구 부수고 판용차를 뒤엎는 등의 시위를 한 것, 연희동 아파트 주민이 시위를 한 것, 74년 청계천 변 송정동 주민이 시위를 한 것 등도 모두 이것에 자극 받아서 일 것이다. 이후 80년대 들어서 사당동 철거반대운동, 82년 노점상 시위, 84년 송인동 신흥동 난지도 폭동 철거민 사건 등으로 계속된다.

물론 이러한 빈민운동 역시 빈민의 생존권, 주거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 항거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거의가 조직화되지 못한 채 터져 나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빈민운동이 지역운동, 공동체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⁹⁾

4. 맺음말

성남은 우리의 파행적 근대화를 가장 집약하고 있는 도시인 것 같다. 사람들은 성남시를 역사 없는 도시, 혹은 거류민의 도시라고 부른다. 건전한 중심세력이 없이 출신자 사람들로 조직된 향우회가 지역 여론과 지역권력을 지배하는 도시라는 자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거류민의 도시라는 규정이 타당하다면 성남은 그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파행적 근대화의 모순을 뒤집어서 새로운 도시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약점은 곧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역사를 잊어버리려 하면 역사의 보복을 받게 된다. 즉 빈민들의 항거의 역사를 주거권과 생활공동체가 확보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자산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1. 폭동인가, 소요인가, 민란인가.

1971년 8월 10일 오전 11시경부터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단대리·수진리 일대의 속칭 [광주대단지]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당시 언론들은 '난동', '폭동'이란 용어로 이 사태를 표현하였으나, 얼마 후에는 '소요 사건'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민란'의 형태로 이를 파악하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광주대단지 소요사건'은 경제개발시대 민중의 탈농-이농-도시난민-빈민으로의 사회화 과정에서 '민중 배제적인' 개발정책·근대화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 요인이 '민란'의 형태로 폭발될 수도 있음을 일깨우게 한 것이었다(1960년의 4·19 '의거'와 1971년의 광주대단지 '소요'와 1980년의 광주 '항쟁'의 비교 연구 필요).

고인이 된 사회학자 최재현은 이렇게 분석한 바 있었다.

"광주대단지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행정당국의 일방적이고도 졸속한 정책 수행에서 찾아진다...광주대단지 사건에서 우리는 국가기구의 계급적 성격을 간취하게 된다. 대단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기구는 자신들을 억압하기만 하는 존재였다. 그것은 급속한 도시화·공업화 과정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봉사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최후 근거까지도 행정 편의를 위해 박탈할 수 있는 압제적 통치 기구였던 것이다".

'앵두나무 우물가 동네 처녀 바람 났네'라는 현상이 전국 농촌마다 일어나 담보 짐을 싸 가지고 '무단가출 상경소녀'로 서울 길을 올라가는 사태가 1960년대 초부터 홍수처럼 벌어지고 있었거니와, 바로 이 같은 사회 이동을 '근대화 공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농촌(고향)의 황무지화→도시 난민화→무허가 철거민화→위성도시 강제 이주로 이어지는 사회 이동은 그 각 단계마다 '자본운동의 수취 구조적인 작용력'으로 촉발된 것이라 살필 수 있는 것이었으며, '철거민 도시'의 건설사업은 그 자본운동이 새로운 '수취 구조적인 공간'을 창출토록 한 것으로 관찰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개발 이익'은 전혀 철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철거민 및

9) 허병섭 목사의 지적,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지역운동과 지역실태』, 민중사, 1986.18쪽.

원주민을 희생시켜 독재권력과 거대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농 숫자는 1960~1965년 사이에 매년 평균 27만 명, 1965~1970년 사이에는 연평균 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1969년에는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가 49.4%로 감소하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대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특히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서울로 집중되어, 이미 1966년 무렵 소설가 이호철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신문연재 소설을 쓰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1964년 무렵부터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를 매년 집행시켜 나갔다. 1966년 4월1일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김현옥은 한양 천도이래 서울의 모습을 제일 많이 바꿔놓은 속칭 '불도저 시장'이었다. '관료독점자본주의적'인 형태로 그는 도로 확장, 도심 정비, 한강 개발 사업을 벌였는데 1967년 말 현재로 13만7천여 동에 이르는 무허가 건물을 3년 안에 모두 철거하기로 하여 대단지 조성에 의한 집단이주, 시민아파트 건설, 불량건물 개량 및 양성화 방안을 세웠다. 이로 인해 그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이던 사당동·도봉동·염창동·거여동·하일동·시흥동·봉천동·신림동·창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 등지에 이른바 '재건 주택촌'이 들어섰다. 하지만 서울은 더욱 팽창하고 이 같은 변두리 집단이주지의 땅까지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계획이 세워지고 불도저가 밀고 들어와 철거민이 다시 철거민이 되는 악순환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의 와우아파트가 붕괴되어 3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다음 해 8월에는 광주대단지에서 민중봉기 형태의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2. 광주대단지 / 성남시는 별개의 도시인가

'소요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광주대단지는 행정적 모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964년 2월 24일부터 경기도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1968년 5월 7일 건설부의 개발인가를 받아 1969년 4월 1일부터 성남출장소 일원에 철거민 이주를 위한 대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69년 5월 2일부터 철거민 집단 입주 시작되었다(서울시장 김현옥은 서울의 14만 채 무허가 건물 중에서 5만 채를 철거하여 이 위성도시로 강제이주 시킬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광주군은 1968년 8월 1일부터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 사업소]를 차렸고, 서울특별시는 또한 독자적으로 1968년 9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사업소]를 설치하였다. 행정업무를 보는 관청이 셋이나 되었으니 철거 이주민의 대접은 자국내 식민지 백성에 다를 아니었다.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를 무시해 버린 채 광주군 중부면 남한산성 기슭 2백만 평을 '대단지'로 지정, 평당 4백원이라는 험값에 이 땅을 농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사들여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노른자위 땅'은 유보지라 하여 묶어놓고 산 비탈의 땅

부터 철거민에게 분양했는데 가구 당 20평씩이었고 분양가는 평당 2천 원으로 그 대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조건이었다.

71년 8월, 소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같은 철거민은 2만여 가구에 10만 명을 약간 사회하는 숫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소요 사태는 '전매 입주자'들의 반발과 저항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철거민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분양증(속칭 '딱지')의 암거래와 그 가격 폭등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을 '대단지'로 조성시키게 하는 거의 유일한 '재원'이었다. 서울시는 유보지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 시가지 조성 초기에 이미 12억 원을 챙기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단대리 중심가의 노른자위 땅값은 이미 그 당시에 평당 30만~40만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골드 러쉬'라 하여 금이 나온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연출해 했던 그 광란의 계절이 광주단지에서 재연되고 있었다. 서울시 자체가 땅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장 신축 부지 마련을 내세운 거대자본을 비롯하여 온갖 땅 투기꾼과 함께 심지어는 전국의 광패 조직마저 이 '인간단지'로 몰려들어 '딱지치기'로 철거민들을 울려 놓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매스컴의 대대적인 '개발 붐' 선전 홍보에다가 온갖 헛소문과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서울의 빈민을 위시하여 미군 철수 소식에 접하고 있는 기지촌 주민은 물론 전국 농촌으로부터 무단상경 아닌 '무단 광주단지 행'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철거민이 받은 '딱지'를 사들여 이곳에 이주해 들어온 자들을 '전매 입주자'라 불렀다. 그 숫자는 4만여 명인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래의 입주자인 철거민 숫자에 버금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대선(1971. 4. 27) 및 총선(1971. 5. 25) 기간 중에는 '화려한' 공약을 남발하였으나, 양대 선거 직후부터 광주단지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딱지'의 불법거래를 금한다 하여 '개발 붐'에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전매 입주자들은 '개발 이익'을 노린 자 들인 만큼 원래의 분양가인 2천 원이 아니라 평당 8천 원~1만6천 원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7월 말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하였다. 아울러 도시개발이 끝날 때까지 면제토록 해주었던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의 고지서들이 날아들었는데 기한 내에 납부치 않으면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강압적인 행정이 민란을 방불케 하는 '소요사건'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6시간 가량 이 도시는 광란의 군중들에 의해 '해방구'가 되어 버렸는데,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 23명이 구속되었다. 뒤늦게 행정 과오를 자인한 당국의 수습책 마련으로 이 사건은 가라앉게 되었으나, 한국사회에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사회 구성체'에 관한 연구가 실은 이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후진국 경제개발 모형'과 '한국형'을 비교하는 제3세계론이 나오게 된 것은 '광주대단지 모델'이 악명 높은 '남미형'의 도시 재개발·신도시 건설의 형태보다 더 악랄한 케이스로 분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 11월 13일의 청계 피복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은 광주단지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학생운동-노동운동-빈민운동(지역문화운동)의 본격적인 등장이었다.

'소요사태' 직후부터 당국은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게 되어 '광주대단지'는 서울시를 배제시키어 9월 13일에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관할하게 되고, 1973년 7월 1일에는 성남시로 승격되어 2개 사업 소, 2개 출장소, 18개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광주대단지의 악몽'을 씻어내려 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의 성남시는 '광주대단지'와는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도시인 것인지 묻게 된다.

힘찬 경제도시 /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 복원 화합도시

오늘의 성남시가 내세우고 있는 시정 캐치프레이즈인데, 성남시청 인터넷 사이트의 통계에 의하면, 이 도시는 총면적 : 141.85km² / 총인구 : 928,196명에 인구 증가율은 연 0.05%로 안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주택 보급률 : 72.7%에 재정규모: 7천1백 31억6천9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0.6%라 하니 지방도시들 보다 높은 편이고, 상수도 보급률 99.8%에, 자동차는 209,509대로 1.5세대 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다. 나름대로 중산층 도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지만, 인터넷 신문 [미디어 오늘]의 다음과 같은 보도가 관심을 끈다.(김두수 기자)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성남시의 대결 구도가 심상치 않다. 이들의 대결 구도가 향후 성남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부딪치는 이들의 충돌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많은 관심을 자아낸다."

3. <달동네>는 과연 사라졌는가

한국문학은 '난민촌문학' / '빈민문학'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윤희길의 <아홉 쉼대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70년대에 배출했다. 이들의 소설은 광주대단지 또는 성남시에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또한 광주대단지에 빛을 지고 있다. 필자는 '소요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현지 취재에 나서서 <월간중앙> 1970년 10월 호에 200매 분량의 르포르트를 발표하였는데, '달나라 동네'를 찾아간 바 있었고 이에 관해서 썼다.

광주단지에서마저 쫓겨나 어찌할 바 없이 무허가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상대원리의 산꼭대기 마을을 그 곳 사람들은 '우마차 동네', '달나라 동네'라 부르고 있었다. 10년 뒤인 1980년 텔레비전 연속극 '달동네' (나연숙 작 / 김재형 연출)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달동네'라는 말은 광주단지로부터 비롯된 난민촌 마을을 일컫는 것이었다.

'달동네'는 이제 이르러 보통명사가 되어 있거니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빈곤과 억압이 지배하는 사람 못살 동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난 공동체 / 생활 공동체 / 문화 공동체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게마인샤프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묻게 되는 것이다.

'달동네'는 과연 사라져 버렸는가. 오늘의 성남시는 '달동네'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무엇을 찾아내었으며 찾아내려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근대화의 일그러진 자화상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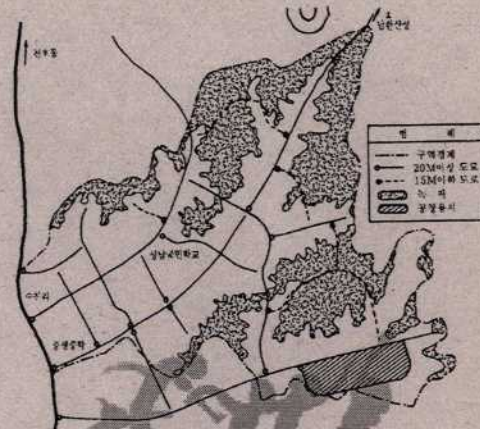
이광일

근대화, 성장과 야만의 두 수레바퀴

서울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비위생과 가난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복개되고 그 위에 삼일 고가도로가 깔렸던 그 때, 산업화는 우리 사회의 지상명령이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복개된 청계천과 삼일 고가도로는 우리나라 산업화 정책, 특히 도시 정책의 가장 커다란 실패작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현장에서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논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 복원에 따른 도시교통 혼잡 문제, 철거 비용을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문제는 비용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발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됐다는 점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생동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산업입국'이나 '수출입국'이라는 모토 아래 밀어붙인 모든 개발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제 더 이상 비용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치적'으로 보이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인간 삶의 파편화, 그 관계의 파괴에 대한 주목이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자신의 삶을 꾸려 가는 존재이다.

廣州大園地計劃圖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인간관계의 극단적인 파괴를 자양분으로 한 '한강의 기적'을 칭송한다. 이구동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회고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런 발상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국난극복이라는 모토 아래 매우 강력한 대중 동원의 수사가 됐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박정희 신드롬' 같은 '구시대의 유령'에 대한 맹목적 기대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발상은 과거 권력과 특권을 누렸던 보수적·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깝지만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여전히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왜일까? 혹시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근대화·산업화가 뿌려 놓은 화려한 성장의 외피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산업화를 추동하는 논리였던 근대화론은 냉전시기 미국의 제3세계 지배와 포섭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발상에는 사람

들간의 삶의 방식,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사회관계에 대한 고민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수출액, 산업성장율, TV 및 라디오 보급률 등이 일차적인 관심사였을 뿐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물론,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성장(률)이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의 파시스트적 지배가 '한강의 기적'과 무관한 듯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그 놀랄만한 성장 지표에 의해 상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야만성이 변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기 쉽다. 물론, 여기에서의 야만은 문명과 대비된 자연적 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야만성은 문명이 심화시킨 비대칭적 사회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파괴하고자 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행위주체의 양심과 사상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및 구속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위태 등은 인간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성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 때 유행한 장발과 치마길이 단속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는 야만성의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야만성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렇지만, 그 극치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이 근대화의 뒤안길은 야만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윤이라는 끝없는 욕망에 추동되는 근대화는 야만성의 재생산, 결국 인간의 삶, 그 관계의 파편화를 다른 한 면으로 하며 스스로를(확대)재생산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산업화가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냉전분단체제 아래서 심화된 정치적 억압과 맞물려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인간의 삶 자체는 심대하게 왜곡됐다. 즉, 성장주의와 매카시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생동적인 모든 사회관계들을 분절시키고 파괴했다. 물론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이에서 오는 모든 부담은 그 사회의 가장 저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에는 그 부담이 도시 빈민들에게 곧바로 이전되는데, 바로 그 전형이 지금은 잊혀져 빛 바랜 기억으로 되어 버린 '광주대단지 폭동사건'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1971년 8월 10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뒷산에는 새벽부터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작은 리본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들려져 있었다.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공약사업 약속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등의 문구가 박힌 전단도 배부됐다. 이들은 11시에 주민대표와 면담을 약속한 당시 서울시장(양택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술렁이기 시작, 급기야 "시장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약 1만5천 명에 달하는 이들은 순식간에 성난 폭도가 되어 세금독촉장을 쌓아둔 경기도 성남지구 출장소 별관 등 3개의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시 광주대단지 사업소와 성남지서를 파괴했는가 하면, 버스 등 차량을 불태우고 이 지역 일대를 순식간에 법의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폭동으로 82명의 경찰관과 5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여 명의 청년이 구속됐다. 폭동은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점차 날이 저물면서 진정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폭동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나마 정부는 도시빈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폭동이 발생했을까? 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로 가속화된 농민층 분해와 그들의 도시 이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시 빈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67년 당시 무허가 건물은 23만3천 기구였고 이 건물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은 127만 명에 달했는데, 68년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광주군 중부면 관내에 50만 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69년 5월 2일부터 송인동, 창신동, 옥수동, 금호동, 흥은동, 흥제동 등 고지대와 청계천, 중앙천 등 하천 변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신도시 건설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선입주 후건설' 방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도로와 교통 편의시설, 최소한의 상하수도 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이주가 계속되어 71년 봄에는 그 인구가 무려 20만 명에 이르게 됐다. 즉, 최소한의 정지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거의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마치 쓰레기처럼 야산, 밭이나 논 등에 마련한 천막에 거주했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거주용된 상태에서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불도저의 움직임과 택지조성 작업을 지켜 봐야만 했다.

71년도 봄에는 주거지 등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이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생명을 잃기 쉬웠는데, 심한 경우에는 하나의 거주용 막사에서 3~4구의 시체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사회법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있는 경우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56.4%를, "약을 먹인다"는 응답이 33.8%를 차지했는데, 소화제와 아스피린이 약의 주종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들은 보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당시 철거민들이 살던 거주용지 생활의 비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10여 일 간 굶고 부황이 난 임산부가 인육을 먹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소문은 그 진위와 무관하게 당시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철거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물질처럼 버려진 이주철거민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이 이주 정책을 추진한 정부 당국의 그 누구도 이들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막막했다. 당시 직장을 갖고 있던 고용인원은 광주대단지에 이주한 20만 명 중 1천3백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다. 그나마 이 사람들도 교통이 불편해 가족들을 광주에 남겨놓고 서울 등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여동, 천호동을 경유해 서울로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버스의 배차 시간도 두 시간에 한 대 풀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경우, 서울에서 살 때는 발이 부르뜨도록 뛰면 그래도 날름팔이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광주에서는 이것마저 여의치 않아 호구지책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웠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대단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어렵다"는 응답이 51.4%, "못 구한다"가 47%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8·10 폭동사태 이후 정부가 부정기

적이지만 양곡이나 밀가루 등을 제공해 호구지책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하루 세 끼를 모두 먹는 경우는 57.1%에 불과했고 그나마 쌀은 13.9%, 보리는 15.9% 정도였다. 아직 다수인 62.6%는 밀가루로 식사를 해결했고, 죽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6.3%에 이르렀다. 이들의 한 달 평균소득을 보면,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35.1%, 5천원 미만이 76.9%에 이를 정도여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 5인 가족의 한 달 생계비가 3만2천5만2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활고가 어떠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8월 10일, 주민들로 하여금 것처럼 격렬한 저항을 촉발시켰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분양지의 불하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7월 말까지 강제 징수하려 했다는 점, 둘째, 생활고를 감안해 일정 기간 면세하고자 했던 지방세를 거둬들이려고 했던 점 등이 지적된다. 즉, 서울시는 애초 불하가격을 5백 원~2천 원 정도로 책정했고 경기도 또한 철거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3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매과정을 경과하며 불하가격을 8천원~1만6천원 선으로 인상했고 설상가상 경기도 사무소에서도 원래의 약속과 달리 지방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폭동이 일어난 11월 8일 집회에서 주민들은 "모이자, 뭉치자! 쫓기해 사정 대열에"라는 제목 아래 "대지는 무상으로 하라" "모든 세금을 면제하라"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당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폭동의 원인, 그 표현의 격렬함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의 외곽 빈민가에서 밀려나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신도시' 광주라는 곳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는 그 열악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광주에서 계속 살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날름팔이라도 해서 삶을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30.1%에 이르고 있었지만, 계속 광주에 남아 살길을 찾겠다는 사람들은 그 배가 넘는 67.8%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무원칙한 행정편의적 발상을 앞세워 삶의 의욕을 꺾는 조치들을 취했고, 이

것이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즉,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이주 정책과 약속을 저버린 즉흥적인 조치들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주민들을 벼랑 아래로 내몰았던 것이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감수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던 것이고, 그 연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분노한 이주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더불어 산다는 것

광주대단지 폭동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불하지가 책정, 세금징수 등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사업 추진이 그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좀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단지 특정한 지역 행정당국이 보인 무책임성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만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이 저임금·저급가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던 관계로 산업화의 진전에 비례해 농민층의 부담은 가중됐고 그 와중에서 분해된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 특히 서울과 도시 외곽으로의 이주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당시 도시빈민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광주대단지 문제도 바로 이런 맥락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도시의 거지는 때깔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적으로 도시는 호부지책을 할 수 있는 꺼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와 그 주변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자리와 일자리는 없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이들은 점차 골칫거리로 인식됐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 주변을, 도시 주변의 외곽 산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수출입국을 꿈꾸는 이 나라에서 대외적인 쇼윈도의 진열품이 될 수 없었다. 쇼윈도는 커다란 공장과 그 속에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 빈민들은 숨겨야 할 대상이었고, 그 적절한 수단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창신동, 답십리, 왕십리, 청계천 등에서 자신의 ‘무허가 삶’을 꾸리던 이들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저임금 구조의 최하위에 존재하는 피수탈자였지만, 이제 산업화의 성과를 알려야 하는 ‘환경미화 작업’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상징적이지만 이것은 청계천 복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기에서 이들은 인간으로서 취급되기보다 하룻밤 타고나 하얗게 변한 구공탄이 오물이 흐르는 개천에 던져지듯이 그런 천덕꾸러기로 취급됐다.

70년 11월, 청계천 끝자락 평화시장에서 어느 한 재단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지 평화시장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회관계에 맞서 인간임을 확인하고픈 한 노동자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광주대단지에서 발생한 폭동 또한 목적의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집단적 인간 선언이었다. 광주대단지는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국가권력과 성장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자본,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자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철거민들이 살 한 평의 땅마저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하는 그들만의 게임장이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행정당국 자체가 땅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 부지 마련을 내세운 거대 자본을 비롯해 온갖 땅 투기꾼, 심지어는 전국의 깡패 조직들마저 물려들어 입주를 위한 ‘딱지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의 봄’을 선전하는 매스컴의 온갖 감언과 헛소문, 시가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주철거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평화시장에서 자신을 불살랐던 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지식인 친구’도 없었으며,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통이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광주대단지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이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만들고 있다는 이 지구촌 시대에, 광주대단지라는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은 오늘도 계속 복제아를 낳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거대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더욱 용의주도하게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벌건 대낮에 용역 깡패들이 동원되어 돈 없고 권력 없는 우리 ‘난장이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이른바 공권력은 구경꾼이 되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며 즐긴다. 폭력에 찌든 철거 대상자들은 높은 망루를 세우고 자신의 소중한 몸에 신나를 뿌린 채, 쓰러져 가는 삶의 근거를 지키기 위해 저항한다. 그 한 평의 땅은 그들에게는 밥이며 목숨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조그만 보급자리가 필요한 이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 지금 폭동의 기억조차 아스라한 광주대단지와 그 주변은 거대한 아파트군을 가진 도시로 변해 있지만, 개발 논리의 뒤에 숨

어 그것을 추동하는 근대의 야만성은 재개발지들과 살기에 쾌적한 숲들을 어떻게 하면 이윤의 원천으로 삼을까 골몰하면서 탐욕의 추파를 던지고 있다. 청계천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흉물스런 모습을 전면에 드러낸 근대의 야만성은 청계천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더불어 사는 삶에 자리를 내주고 우리의 곁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한 번 지켜볼 일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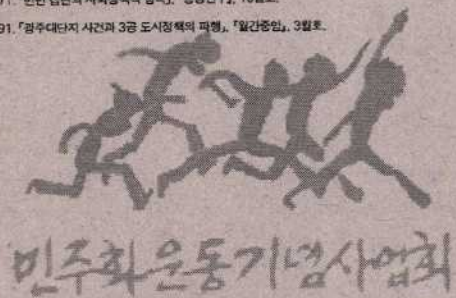
8·10 30주년 기념실패지엽 자료집(2001)

박태순, 1971. 『광주단지 4박 5일』, 『월간중앙』, 10월호.

서울대 법과대학 사회법학회, 1971. 『광주단지 빈민살해조사 보고서』.

이상연, 1971. 『빈민 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청강연구』, 10월호.

장세훈, 1991. 『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 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 3월호.



이광일 nanjangi@orgio.net | 「정치비평」 편집위원, 「시민과 세계」 객원편집위원. 논저로는 『20세기 한국
의 야만』, 『민주화이행,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 그리고 『해게모니』 외 다수.

광주 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

<다음 사건>

1971년 8월 10일 하루 동안 경기도 광주군(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신개발지역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

196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빈민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광주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다. 그런데 광주대단지 이주사업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토지투기의 만연이다. 그것은 서울시가 부족한 단지조성 재원을 개발차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철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불법전매된 분양권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지 내 2만 1,372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6,343가구를 차지했다. 셋째,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주지역 내에는 대부분이 도시빈민이던 주민의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다. 교통이 불편해 생계수단이 있는 서울시내를 왕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손수레와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여서 차량으로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건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철거민은 이주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다시 무허가로 정착했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대단지 건설을 강행했다.

행정당국은 전매입주자들에게 이주민 분양가의 4~8배에 해당하는 평당 8,000~1만 6,000원의 지가를 일시에 불입할 것과 이주 초기 단지 내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를 독촉했고, 이러한 정책들을 시정, 생계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가격인하·취득세감면·세금부과연기·긴급구호대책마련·취역장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장이 이주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다.

<실록 민주화운동> 발췌 산업화 뒤안길 貧者의 치절한 투쟁

황량한 벌판 햇볕만 겨우가린 철거민수용소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던 5만의 함성
그것은 난동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1971년 8월10일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광주군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5만여 주민들의 소요와 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이 거의 진공상태에 있었

음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3공화국이 추구한 공업화와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전략은 필연적으로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켜 62년 전체인구의 57%를 점유하던 농가 인구가 69년 49.4%로 급감했다. 대도시로 밀려온 이농 인구는 서울 번두리지역에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했고 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도시 미화정책으로 미아동,상계동,중계동,구로동,봉천동,시흥동 등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단지 빈민촌의 수평적 자리 이동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근본적인 빈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미분책은 강제 철거과정에서 수많은 불상사를 초래하면서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건 이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68년 마침내 서울시는 경기 광주군에 2백만평의 단지를 조성해 50만명의 도시 빈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5만5천가구 28만여명을 이주시키기로 했다. 이 계획은 3백 50만평에 35만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70년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소요 예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다음해에 있을 양대 선거를 의식하여 급조한 것이었다. 결국 '경영 행정'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시가 헐값에 매입한 땅을 고가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쟁겨 시설투자비로 썼을 뿐, 희망에 부풀어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14만여명(71년 8월 기준)의 이주와 정착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애초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자금자족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71년 4월 대선과 5월 총선이 끝나자 당국의 분양토지 전매 금지와 함께 황량한 벌판에 실업상태로 주저앉은 주민들은 곧바로 굶주림과 마주쳐야 했다. 가난의 속살은 끔찍했다. 단대리 철거민 가수용소의 천막은 간신히 햇볕을 가릴 수 있을 뿐, 노천 변소의 오물은 사방으로 넘쳐 인근에 악취를 풍겼다. 굶주린 어린이의 앙상한 뼈다리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는 지계품을 팔래도 팔수가 없었다. 1시간30분 걸려 서울 을지로 6가까지 가는 시영버스가 있긴 했으나 차비 35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월14일 전매행위 금지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주민들에게 "분양 토지 20평을 평당 8,000~1만6천원씩에 불하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7월 말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평당 150~400원에 매입한 땅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철거민 1가구당 평당 2,000원씩 20평의 택지를 분양하고 대금은 입주 후 3년 되는 해부터 3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있던 그들은 통치서 말미의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위협 앞에 경악했다.

7월19일 '분양지 불하 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결성하고 대지 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내리며, 대금은 10년간 연부 상환하고,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며, 영세민의 취로 알선과 구호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부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에게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주민 대표 217명은 대책위원회를 투쟁 위원회로 개칭한 다음 8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를 '최후 결단의 날'로 택했다. '모이자, 뭉치자, 쫓기하자, 시정 대열로'라는 전단을 뿌리고 벽보도 붙였다.

주민들의 격앙된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서울시는 양택식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10일 오전 11시에 주선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들의 제의를 스스로 저버렸다. 성남출장소 뒷산에 저마다 피켓, 몽둥이, 삽 등을 들고 가슴에는 '허울좋은 선전' 말고

실질 군중 구제하라는 노란색 리본을 단 5만 군중들은 초조하게 서울시장을 기다렸다. 야산은 플래카드와 피켓의 바다로 변했다. "배가 고과 못할것다" "토지 불하 가격 내려달라" "백일에 산 땅 만일에 파는 폭리를 하지 말라" 등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11시가 지나도 양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11시45분. "또 속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누군가 "내려가자"고 외쳤다. 선두의 300여명이 맨먼저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곧 연기와 함께 불길의 치솟아 올랐다. 출장소 옆의 관용 지프도 불타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한 주민들이 대단지들 누비는 동안 진화작업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긴급 출동한 경찰도 모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여름 비가 추적이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비닐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시위는 서서히 난동으로 격화되었다.

오후 1시40분쯤 서울시경과 경기도청 소속 기동경찰 700여명이 나타나자 주민들은 더욱 흥분하여 투석으로 맞섰다. 오후 2시 광주경찰서 성남지서, 순찰차, 수진리 남문주유소 등이 불타다. 빗속에서 쫓고 쫓기는 난투극은 계속되었다. 굶주린 채 핏발선 눈으로 경찰과 대치하던 주민들은 때마침 지나가던 참의 트럭에 달려들었다. 진흙탕 속에 섰노란 참의가 쏟아져 뒹굴었다. 순식간에 이들은 한 트럭분의 참의를 헤치었다.

오후 5시쯤 양시장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 속의 테도는 6시간 만에 일단락 되었다.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했고, 2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결국 주민 22명이 구속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8월11일 곧바로 내무부는 광주 대단지들 '성남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양주군수를 초대 시장에 내정하여 독립된 지자체로 운영 관리토록 했다. 1인당 3.6kg의 구호 밀가루 지급, 대단지 개발을 위한 공장 건설, 1일 3,000명의 취업 인원 확보, 상수도 건설, 경부고속도로 서초리 인터체인지를 잇는 도로 개통 등 후속대책도 나왔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교회를 흔들어 깨웠다. 대단지 안에 30여개의 교회가 난립해 있었지만 아무도 빈민들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다. 사건 직후 김관석 목사가 총무로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청계천에 '수도권복수지역선교위원회'를 설립하고,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세미나에는 70~80년대 민주화의 메카가 되었던 종로5가 기독교회관 중심 세력이 집결한다. 권호경, 박장빈, 김동완, 이해학 등은 필리핀 빈민지역 연구에 몰두하며, 손학규, 허병섭, 이철용 등도 수배당해 피신중이면서도 도시 빈민 문제에 개안하게 된다. 예수교장로회 김진홍 목사의 활빈교회 설립에 평생 '빈자의 빛'으로 살게 되는 제정구가 참여한다.

71년 10월17일 박정희의 위수령 포고와 함께 한신대에서 제명 당한 늦깎이 대학생 이해학은 광주 대단지에 세계교회협의회 지원 받아 빈민을 위한 대형 병원을 설립할 꿈을 안고 성남으로 이주한다. 난동사태를 경험한 대다수 주민들은 어린이 놀이방 등 시설에 모여 들고 이를 기반으로 73년에 '주민교회'를 세워 현재까지 성남시청 옆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형 빈민 병원 설립의 꿈은 국내의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 지금 주민교회 지하층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중국 동포의 집'이 입주해 이주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실록민주화운동 발췌

<성남 뉴스넷>

다시 광주대단지사건을 말한다

성남의 역사...난동의 오명을 벗겨라!

분다리 시민기자 bundari@snews.net

1969년 4월부터 성남의 모태가 된, 이른바 광주대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대단지에서 서울에서 내쫓긴 철거민들이 강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촌이 형성되고 판잣집, 브로끄집, 심지어 루팡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이란 도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예비·에미들은 막노동, 행상을 해가며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때를 지어 인근 야산에 올라 쉼썰미를 캐곤 했습니다. 성남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광주대단지는 차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살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삶들이 어우러져 사람냄새 나는 삶의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며 지역적 삶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남적인 것'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광주대단지 개발은 세경 불도저 시장이라 불리던 육군 준장 출신의 서울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계획과 실행을 포함한 개발의 전과정은 사람의 도시를 만들려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명령이었습다. 도시의 비전이란 없었습니다. 도시적 기능이라든가 생활대책 같은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애초 방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발이 사실상 야산들을 불도저로 밀어내는 일이 전부였던 까닭은 서울시가 철거민을 대단지로 내쫓을 목적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새 서울을 만든다고 거짓선전을 일삼으며 의도적인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땅장사들 한 것입니다. 권력은 민초들의 삶을 보듬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짓밟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 7월 14일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조치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지 사람들에게 이 조치는 청천하늘에 내리친 날벼락이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대지불하 가격을 배로 올리고 높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정을 맡았던 경기도도 등기도 되지 않는 가옥에 높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대단지 사정은 철거민이나 전매 입주자나 다들 살기 막막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단지 사람들을 죽이려는 조치가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단지에는 밥줄이 끊어지는 불경기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나마 힘겹게 이어오던 대단지에서의 삶은 권력의 수탈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항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격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71년 8월 10일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입니다. 그 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만의 사람들이 권력의 수탈에 맞서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대단지 사람들은 결코 권력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탈의 부당함을 여지없이 폭로했습니다. 투쟁을 통해 지역적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시 권력과 언론이 매도한 대로 광주대단지사건은 아직도 난동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해전 지역시민단체에 의해 재조명작업이 있었고, 작년에는 성남뉴스에서도 재조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 지역시대에 걸맞은 재조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역사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남의 내일을 밝게 열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남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범시민적인 재조명과 이를 바탕으로 자치시대로 가는 힘있는 역사적 자산으로 삼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다. 광주대단지사건에 가워늘리는 한, 성남의 봄, 자치의 봄은 멀리 있습니다. 성남의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니다.

분다리 시민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쓴 시각 : 2003-08-08 오전 4:07:46

<도시뉴스> 8.10 사태는 난동이나 폭동이 아니다

30년전 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주민들의 난동사건이나 폭동사건으로 다루서는 아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한 학술회의 결과에서다. 돌이켜 보면 20세기 후반기의 서울 도시계획은 무허가 건물과의 싸움 바로 그것이였기 때문이다.

광주 대단지에 이주시킨 서울의 무허가 건물 철거민들에게 평당 1만6천원에서 8천원까지의 약 20평 내외의 토지 가격을 납부할 것을 명시한 고지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백원에 뺏은 땅 만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 반대!

위와 같은 포스터가 집집마다 첩부되고 배라도 만들어 뿌려지던 시기에 경기도 성남출장소장 명의로 된 토하나의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니 건물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급기야는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8월 3일에 긴급 소집된 투쟁위원회는 8월 10일에 주민 쉼기대회를 열기로 합의한다.

1971년 8월 10일

이날은 아침부터 흐린날씨였다가 비가 내렸다. 그러나 양택식 서울시장이 현지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투쟁위원회측은 이 기회에 대대적인 쉼기대회를 갖기로하고 새벽부터 전단을 뿌리며 대회장으로 정한 성남 출장소 뒷산의 공지로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울시장이 직접 현지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단지에는 크게 술렁 거렸다. 오전 9시가 넘으면서부터 플랭카드와 피켓을 든 군중들이 대회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10시경에는 3만여 군중이 성남출장소 뒷산을 온통 뒤덮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몸동이를 들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양 시장은 약속시간보다 10분정도 빨리 도착했다. 출장소 뒤편에 구름같이 모여앉은 군중의 존재는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했다. 양 시장과의 면담장소를 급히 제1공업단지내 삼영전자(주) 회의실로 옮기기로 했다. 대표자들과의 회의는 채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양시장이 요구조건을 쉽게 받아들인 때문이었다.

아래와 같은 4개항이 합의 되었다.

1. 전 매입자들의 대지 가격도 원 철거이주자와 같이 한다.
2.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자조근로공사를 아울러 실시한다.
3.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보류하도록 하며 그밖에 세금도 가급적 면제 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4. 주민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계속 지역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양 시장과 대표자 간의 그와 같은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때 이미 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공식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려는 지역내부의 권력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에서 가치중립적인 8.10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호명한다.

중앙 언론은 난동이란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에는 주동자에 대한 매서운 다스림을 주문했다. 치안국장은 과격 불온한 집단내용, 인원 규모 및 난동자의 질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난동이라고 규정했고 내무부의 보고서 제목은 성남단지 난동사건 분석이었다. 특히 당일 이후에 서둘러 발표된 치안국장 성명은 사건을 난동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암시되고 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다.

지금 성남은 또 한차례의 파행적 도시공간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 8,900명을 수용할 판교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구시가지간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와 이러한 구획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본질적 접근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파행은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있다.

삼색도시 천당 밑에 분당, 천당 위에 판교 등의 말들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10 사건을 역사적으로 재조명 한다는 일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야한다. 왜냐하면 8.10사건은 일화적인 해프닝 사건이 아니라 외곡된 공간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운동과정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기존의 정책을 반성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 지역 외부에 기인하는 문제는 지역 외부와 관련된 요인들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지역내부와 관련된 요인은 내부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8.10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에 관한 명칭을 시종일관 난동이라고 표기하고 아울러 그렇게 규정하기만 한다.

그 당시 신문들마저 통상적으로 소요사태, 소요사건 리라고 하였는데 이미 30년의 세월을 넘긴 현재에 이르도록 난동이라 한다. 객관적으로 이 사태 사건을 검증해 볼수 있게 되었음에도 어째서 난동이라고만 고집하는 것인가?

광주대단지사건이라는 명칭은 비유컨대 비석조차 세우지 못한 역사의 무덤에 그냥 이 사건을 매장한채로 망각시키고 말았으나, 아니면 기념비와 기념관으로 이를 기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나 아직 결정을 유보시켜 놓은채 일단 지번 번호만 매겨놓고 있는 형태와 흡사한 호칭이라 할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시키지 아니하여서는 97만인구의 오늘의 거대도시 성남시의 시민문화를 제대로 올려세울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선 역사의 문패부터 제대로 달아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주최측의 판단이었던 듯하다.

이 사건의 성격을 투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와 항쟁으로 파악코져하는 다른 견해가 강하게 제출되었던바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간 오늘에도 여전히 광주단지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광주단지 투쟁사건 광주단지 항쟁사건이라 부르고자 해도 이는 공의를 도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철거민 난민 부랑민이라는 어휘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특별시 행정당국의 공문서에 폭동.난동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긴급 시정되어야 한다.

성남출장소의 국민/시민/주민/정착민이 행정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쫓겨난 생존권을 위한 투쟁/항쟁/봉기/거사/사건 이라야만 옳다.성남시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남시민사회의 자기 정체성 확보다.

그리고 난 후 8.10사건은 8.10성남주민봉기 정도로 표현하는게 정상일것같다.

등록일 2004-12-17 [14:40]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작업 본격화

"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난동이라니..."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신청서 접수...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김락중 기자

"황량한 벌판 햇빛만 겨우가린 철거민수용소, 찢발선 눈으로 울부짖던 5만의 함성, 그것은 난동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71년 廣州대단지 사건 개요(실록 민주화운동 발췌)

이른바 '철거민들의 폭동'으로 알려져 온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작업이 35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동근 성남문화연구원장과 김광수 주민교회 목사,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이재명 변호사 등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사건 재조명 등을 위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방문해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 광주대단지를 아십니까?'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재행정의 피해자, 성남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8.10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8월 10일 '8.10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주최로 광주대단지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2004년 12월 성남문화원 주최로 광주대단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위한 재조명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01년 당시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을 폭동이 아닌 민중항거라는데 의견일치를 본 바 있다.

성남문화연구원 소장은 "8.10 이야기는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살려내면 성남시 정체성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이제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 작업을 계기로 광주대단지 사건 이야기가 성남사람 모두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 이야기가 없는 도시의 개별화를 넘어서고, 성남에서 서울의 얘기만 늘어놓는 서울의 일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1973년 광주군 중부면에서 성남시로 승격됐으며, 1990년대 초 분당 새도시가 들어선 성남시는 현재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를 이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종로구 인사동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김기수 작가의 '광주대단지'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6/02/22 [21:52]

<성남투데이>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 나선다"

수정중원 재개발, 정부의 책임 촉구

과거사 정리에 신청서 접수...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요청

김락중 기자

"황량한 벌판 햇빛만 겨우가린 철거민수용소, 찢발선 눈으로 울부짖던 5만의 함성, 그것은 난동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71년 廣州대단지 사건 개요(실록 민주화운동 발췌)

이른바 '철거민들의 폭동'으로 알려져 온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작업이 35년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고문조작 피해자인 김철씨를 비롯해 은행골 우리집 김광수 목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신청인 대표 이재명 변호사 등은 시민들과 함께 23일 오전 '진실과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인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박정희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면서 송파대로까지 진출하다 구속된 김철씨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목숨을 건 마지막 절규였었다"며 "성남시를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서고 민중항쟁으로서의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한 뒤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계권의 그림자,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성남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성남구도심의 과밀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본질적 책임자로서 성남탄생의 과정을 밝히고 피해자인 성남시민에게 사과할 것 ▲정부는 당시 구속된 22명의 고문 조작 사실을 밝히고, '난동'으로 규정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정당한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재규정 할 것 ▲서울시의 무모한 도시정책으로 성남 구도심 재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인정하고,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의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진실규명신청서'청구인 대표의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변호사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규명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청계천은 성남시민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는 곳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독재행정의 피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성남은 재개발 또한 불가능한 지경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보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김기수 작가의 광주대단지를 주제로 한 '대단지'전시를 관람하였고, 김기수 작가는 성남에서의 전시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8.10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8월 10일 '8.10 광주대단지 사건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주최로 광주대단지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러한 지난 2004년 12월 성남문화원 주최로 광주대단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 회의가 개최되는 등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위한 재조명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01년 당시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을 폭동이 아닌 민중항거라는데 의견일치를 본 바 있다.

기사일력: 2006/02/24 [11:13]

<출처는??>

3. 사건배경

1960년대들 통하여 제3공화국이 추구해온 공업화, 독점자본 중심의 개발전략은 농업과 공업 사이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히 농촌경제의 피폐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대거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대도시로 밀려온 농촌인구는 대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도시의 고지대에 빈민 지역을 형성하면서 대도시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강제철거 방식을 통한 판자촌의 도시외곽으로의 분산, 소개(疏開)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사후처리 등이었다. 그러나 강제철거 후 빈민들은 또 다른 곳에 무허가 주택을 지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없이 판자촌의 자리만 바뀌는 셈이었다. 또한 강제철거는 빈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곳곳에서 철거반과 판자촌 주민 사이에 불상사를 초래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당국이 제시한 것이 시민아파트 건립과 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이주계획이었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의 경우도 발표 당시에는 집없는 빈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1968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의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시내 18만 채의 무허가 건물 중 우선 5만채를 헐어 옮겨 수도 근교에 새로운 위성도시로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1970년까지 3년 동안에 경기도 광주군의 약 200만평의 땅에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이곳에 불량주택 주민 약 55,650 세대 278,000명을 이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계획을 활발히 추진시키지 못하다가 1970년 봄 양택식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260억에 달해서 세원이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시장국이 고안해낸 것이 소위 '고도의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삿속이었다. 즉 서울시가 경기도 땅을 평당 400원선에 매입, 철거민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히 땅값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그 땅을 매각하여 시설투자비, 행정지원비를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 없어진 청계천 주변 등을 복개하여 그 부지를 처분할 경우 또다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기대에 부른 판자촌 주민들이 광주단지로 대이동을 하자 광주단지 일대는 개발붐이 일어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 기회에 유보지를 매각한 서울시는 많은 이익을 보아 1970년 7월말 현재 약 12억원을 시설투자자로 전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붐은 하루벌이 주민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대단지에 가면 그러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농촌, 어촌, 도시의 많은 영세민들이 대단지로 몰려들기도 했다. 그래서 1971년 8월에는 판자촌 철거민 21,372가구 101,325명 이외에 전매입주자 6,344가구 14,000여명, 공장 입주 및 유보지 매각 등에 따라 전입한 사람 2,950여 가구 13,660여

명, 무작정 이주자 15,000여명 등 포함 14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더욱이 197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선거가 몰고 온 공약세례는 많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해 들이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열풍이 지나고 서울시가 분양토지 전매행위 억제조치를 취하자 토지 투기업자들은 하나둘씩 단지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부동산 매매가 한산해지면서 개발붐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의 복지가 고려된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능력도 없는 서울시가 개발의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원을 할 리도 없었다. 결국 개발붐의 후퇴는 단지 주민들의 실업을 의미할 뿐이었다. 스스로 생계의 터전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단지로 밀려온 사람들로만 구성된 광주대단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50만을 넘으면 주민들 서로가 주고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된다"는 서울시의 이론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줄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밀려든 불경기로 인해 단지 주민들은 기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런 자급자족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황무지에 갑자기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집단적인 실업상태가 계속되자 일부의 사람들은 대단지에서 울지로 5가까지 왕복 70원이나 들어가며 서울 시내로 들어왔으나 차비를 벌어가기도 힘들었다. 지갯일을 하자면 지게를 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버스를 탈 수 없으므로 서울까지 한나절 길을 걸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5월 26일 서울시는 더 이상의 전매행위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전매 입주자는 6월 10일까지 전매입한 땅에 집을 짓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는 통고를 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전매입주자에게 분양토지 20평을 평당 8,000-16,000원씩에 불하하며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7월말까지 상환하라는 통고를 하였던 것이다. 발부된 통지서에는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위협적인 단서까지 붙어 있었다. 또한 경기도 당국은 당국대로 토지 취득세 부과통지서를 주민들에게 발부하였다.

4. 사건내용

7월 17일 주민들은 '광주대단지 토지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조직,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 당국에 수차 진정을 하며 때로는 산발적인 데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당국이 우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대표 217명을 선출한 뒤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한 다음 8월 10일을 '최후 결단의 날'로 택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플래카드, 피켓, 벽보 등 3만여장을 준비했다. 8월 10일 오전 8시부터 '모이자 모치자 쫓기하자 시정 대열'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집집마다 뿌려졌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서울시는 양시장과의 직접 단담을 10일 오전 11시에 주선해 주겠다고 제의해 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들의 제의를 스스로 묵살하였고, 그 결과는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나타났다.

성남출장소 앞에 모였던 5만여 군중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양시장은 주민들에게 ① 전매입주자의 토지불하 가격은 원 철거이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평당 최고 2천원선으로 낮춰주겠으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②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취득세 면세는 경기도 당국과 협의해서 부과를 보류하고 면세의 혜택을 적극추진하겠으며, ③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당분간 관망하겠

다"는 뜻을 밝히고 해산함으로써 8월 10일만에 결친 소요는 진정되었다.

이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월 11일 내무부는 광주대단지들 '성남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 양주군수이던 이석봉을 초대시장으로 내정하여 광주대단지들 사실상 독립된 지방자치체로 운영 관리토록 함.
- 자조근로사업을 표 1인당 3.6kg의 구호 밀가루 지급 시작.
- 대단지 개발을 위한 공장건설, 주택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9월부터는 1일 3천명선으로 취업인원을 늘림.
- 9월 3일에는 광주대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서초리 인터체인지를 잇는 도로 개통, 급행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40분대로 단축되었고,
- 9월 28일에는 경기도가 성남단지 월동대책을 위해 9억 550만원의 예산을 확정.
- 10월 14일에는 정부가 서울시 주관인 대단지 사업을 경기도에 이관, 경기도가 앞으로 3년동안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성남단지를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개발하도록 확정함으로써 성남단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재조정하였다.

5. 관련자

1972년 1월 29일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 6부는 광주대단지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21명의 피고인 중 경찰 지프를 불태운 이 모에게 징역 1년 6월 장기2년 율, 이강철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8명의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0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8명)을 선고하였으며, 김무산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1972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검찰,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6. 사건성격

70년대 초 당시의 노동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세 가지 유형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노동자 인간선언'과 함께 분신한 전태일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 노동조합 결성을 저지하려는 기업측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한 김진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다면, 그 세 번째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하여 한계생존도 어렵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도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못한 채 노동예비군을 이루고 있던 대규모 도시빈민들의 삶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 71년 8월 10일의 광주대단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광주대단지사건은 당국의 무모한 개발계획과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태도,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즉 주민들의 취업환경, 구호대책 등에 대한 고려없이 많이 모이다보면 그들 사이에서 주고 받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논리를 근거로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능력의 판자촌 철거 및 무계획한 강제이주가 일어났다.

9월 14일 국회안보질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가난이 죄라고 하겠지만 2천 원에 사는 사람이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동"이라고 매도했으나, 광주대단지 사건의 핵심은 소요사태발생의 계기가 된 전매업자들에게 대한 당국의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 드러난 철거 이주자들의 기아선상에 이른 비참한 생활상이었던 것이 다.

② 김성배 등 난동 주모자 21명 구속으로 마무리지어진 광주대단지 소요사건은 도시 빈민지역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1960년대 말부터 이들 도시 빈민층에 관심을 갖고 빈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성직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 강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7. 참고문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1987, 193-196쪽.

<참조자료 >

자료1) 신문기사

「광주대단지 주민난동, 빗속의 대치 5시간」

10일 광주대단지는 3만명의 성남 군중으로 약 5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되었다. 9일 밤 11시 30분까지 서울시의 최중환 제2부시장 등 관계자들은 주민 무마작업을 벌였으나 광주대단지 불하가격대책위원회(시정투쟁위원회)는 10일 날이 밝자마자 단지내의 집집마다 인체된 전단을 뿌리고 쫓기대회에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이자, 뭉치자, 쫓기하자, 시정대열에!>라는 제목을 단 전단에는 ①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으로 폭리 말라. ②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③공약사업 약속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④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말라. ⑤이간정척 쓰지말라. 단지시민 안속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군중들은 9시께부터 모여 들기 시작, 10시에는 출장소 뒷산이 온통 군중으로 덮였고 출장소 마당을 비롯한 빈터와 간선도로도 사람들로 들어찼다. 삼시간에 모인 군중은 추산 3만여명, 20대 청년과 30~40대의 장년들은 편을 지어 <허울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는 등 플래카드를 들었고 군중들의 가슴에는 <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반대>란 리본까지 달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든 군중은 양시장이 불하대책위와 약속한 상오 11시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웅성했다. 11시가 되자 양시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중은 「시장이 시간을 어겼다」 「우리를 사람 취급 안한다」면서 흥분, 150m 떨어진 서울시 대단지사업소로 몰려갔다. 몰려가던 군중의 일부는 성남출장소 입구 길에 세워둔 서울시 환지과장의 서울관 1-356호 지프를 때려 부수 개울바닥에 처 박았다. 사업소에 몰려 간 젊은 난동자들은 닦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 곡괭이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사무실 5개가 있는 1백평 사업소 안에 있던 선동기 4대, 전화기 4대, 마이크 4대, 형광등 40개, 캐비넷 30개와 철계 책상 등을 파괴하고 벽에 걸린 사업계획서, 사진, 서류 등을 찢었다. 이 붐에 사업소 직원 92명은 모두 달아났고 달려왔던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도 군중에 위압당해 모두 사라졌다. 11시 40분께 주민들은 성남출장소로 다시 밀려가 총무, 재무, 사회개발계와 소장실이 있는 130여평의 본관 건물로 침입, 책상과 의자를 때려 부수고 서류를 꺼내 불을 질렀다. 사무실 내부에 있던 모든 서류가 타 버렸으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민원사무실은 본관과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유리창만 깨지는데 그쳤다. 12시 30분께 광주단지내에 있는 성남소방지서 소방차 2대가 달려 왔지만 군중들에 밀려 접근을 못했고 광주경찰서 기동경찰대 1백여명이 이들을 말리려 했으나 손을 쓰지 못했다. 시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10시 30분쯤 끝낸 양택식 서울시장이 광주단지에 도착한 것은 군중들이 난동을 시작하고 10분쯤 지난 상오 11시 30분께. 양시장은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제1공업단지내 삼영전자공업사 회

의실에서 대핵위 전성천(全聖天) 목사 등 간부 3명과 면담, 이들의 주장을 듣고 가능한 데까지 요구조건을 들어 주겠으니 난동을 중지시킬 것을 대표자들에게 당부하고 대표자들도 이에 합의했다. 대표자들이 합의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양시장과의 합의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만큼 난동은 난폭해져 있었다. 낮 12시 10분경, 양시장은 광주를 돌아서 서울로 갔고 청·장년 5천여명은 때를 지어 양시장과 서울시 간부 및 단지사업소 직원들이 있다는 풍문에 따라 이곳 저곳으로 몰려 다녔다. 이들은 모두 술냄새를 풍기며 성남출장소 마당에 세워 둔 7-492호 반트럭 등 눈에 띄는대로 관용차를 불태워 개울에 처넣었다. 하오 1시부터 난동자 40명은 난동사태로 운행을 못하고 세워 둔 서울 영 7-281호 시영버스를 뺏어타고 <서울로 가자>며 수진리 고개로 향했다. 2시경에는 난폭해질대로 난폭해진 청·장년 5천여명이 단지 앞 50m 간선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버스·트럭을 마구 뺏어타고 단지안 간선도로로 몰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경기 영 5-2580호 트럭이 이들에게 뺏겼고 운전사 박정호씨(35)는 등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단지로 들어오던 서울 영 6-2845호 버스 운전사 김봉호씨(49)는 난동자들에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하오 2시경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명이 단지입구 수진리 고개에서 이들의 서울 진출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난동자들은 돌로 맞았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50명이 대단지 입구에 도착한 것은 하오 2시 15분경, 광주경찰서 기동대 4백명이 도착한 것은 하오 3시가 가까워서였다. 이때부터 난동자들은 경찰과 대치, 들팔매와 욕지거리로 맞았다. 난동자들은 하오 5시 20분경 서울시가 모든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뿔뿔이 흩어졌다. 이 밖에도 난동자는 하오 2시 30분경 성남파출소를 에워싸고 아우성을 치며 몽둥이로 파출소 유리창을 모조리 부순 다음 파출소 앞에 세워둔 광주경찰서 2호 백차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버렸다.」(한국일보 1971년 8월 11일자)

생활난에 부딪친 꿈의 광주대단지

난동의 물결이 휩쓸고간 11일 광주단지주민들은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일터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분양계획이 너무 성급했으며 '선 생활여건조성, 후분양'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10여의 사태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나 켈기대회가 난동으로 번진 것은 '먹고 살길이 없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거리가 없다는 불만의 누적이 분양문제가 나오자 기름에 불길이 닿은 것처럼 견잠을 수 없이 번져갔다는 것.

시민의 세금을 한푼도 안쓰고 경영행정으로 인구 35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결들여 무허가판자집을 일소해보겠다는 서울시의 의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주민들의 현실적인 생활은 시당국의 의욕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

단지 282단지 158호 김진환(31, 목수)씨는 지난 4월 이후 일거리가 부족 줄어 요즘은 열흘에 한두번밖에 없어. 월수입은 평균 4천여원.

세식구가 입에 풀칠하기에 빠듯하다고 했다. 그나마 밀가루만 먹어야 하는데 이틀에 한끼 정도는 걸러야 한다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20일 입주하기 전만해도 시내 해방촌에서 전방장사를 하며 그리저럭 살아왔다.

대단지에 온 후 리어카 행상을 하다 집어치우고 목수 일에 뛰어들어 조수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선거이후 경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지난해 11월

18일 9만원을 얻어와 꽃감 빼 먹듯이 까먹고 있다는 것이다. 전매입자인 김재성씨는 지난5월 경북안동에서 15만원을 주고 입주권을 사 갖고 왔다.

부인등 네 식구가 '광주대단지에 가면살수는 있다'는 소문하나만 믿고 올라온 것.

전매입자는 집을 짓지 않으면 입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소문에 2평짜리 불목건물을 세웠으나 일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서울에 일거리를 구하기도 막연해 오도가도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6월 14일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철거당해 단대리에 가수용중인 서영렬씨는 서울시가 단지안에 내불인 취로 알선공고를 보고 해당공장을 찾아다니고 있으나 20일째 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D타이어를 찾아가지 '눅었다. 내일오라'면서 둘러보았고 제2공업단지를 가봐도 공사가 아직 시작 안됐다고 퇴짜를 놓더라는 것이다.(조선일보 71.8.12)

단지 284단지 김재성(金在成)(29)의 경우, 김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군에서 「서울의 광주대단지에 가면 집도 주고 공장도 있어 직장도 갖게 되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만 듣고 살림을 정리해 무작정 상경했다. 대단지는 선거열풍에 들떠 있었다. 가지고는 15만원을 주고 북덕방을 통해 입주권을 겨우 한 장 샀다. 그것도 싸게 샀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흐트러하면서..... 그러나 그 종던 기분도 한때 뿐 선거바람이 가시고 부터 풀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일천 데 달린다고 돈을 벌어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 수포화된 데다 전매한 땅위에 6월10일까지 집을 짓지 않으면 불화가 무효로 되어버린다는 말이 나돌았다. 가지고 있던 밀전을 다 털어 2평 짜리 불목을 영성하게 흥내내어 짓고 눈가림을 해왔다. 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서울시내로 나가 막벌이라도 하려해도 고향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당장 끼니가 걱정이다.(르보 광주대단지. 신동아 71.10)

김문수, 나는 아직도 벵타이가 어색하다.

처음 서울에 와서 내가 느낀 것은 서울이란 도시는 나 같은 촌놈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어마어마하고 답답하기도 한, 비정한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70년 4월 내가 속에 있던 후진국사회연구회 선배와 친구 몇이서 용두동 판자집에 자취방을 얻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는 그 같은 느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난에 대한 나의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판자집이, 아니 내가 살던 판자집보다 훨씬 못한 판자집이 용두동에 지천으로 단지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꺼먼 냇물엔 똥이 똥똥 떠내려가질 않나, 변소는 아침에 끓고 예쁜 처녀들이 불일을 보는데 엉덩이가 보일정도의 뽕한 공동변소이질 않나, 그것도 줄을 서서 한참씩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나, 너무 한다 싶었습니다. 서울선배들의 지도와 토론학습을 통해 나는 가난에 대한 나의 개인적 열등감을 비로소 사회적 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용두동 판자촌의 자취방은 학회 훈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에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이 있는 반면 비참하고 왜소하고 음침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것은 결론코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배들과 같이 간 곳이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였습니다. 이곳은 용두동 등 서울 곳곳에 빌려 있던 판자촌을 철거하여, 서울과 거리가 먼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만들고 있던 인공의 철거민도시였습니다. 강제철거와 이주과정에서 시당국과 철거민사이에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니 허허벌판에 산만 벌겍게 불도저로 밀어 놓고 거기에 텐트 하나에 많게는 1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우글거리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모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자기가 낳은 애를 살아 집안 식구가 나누어 먹었다는 기막힌 소문도 철거민촌 곳곳에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때의 용두동 판자촌과 광주 대단지의 아프면서도 슬픈 인상이 내게는 아직껏 지워지지 않고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 같은 건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고 기억에도 남아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내가 태모에 열심히 뛰어들어 온 것은 그 길이 바로 저런 비참한 사회의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박한 신념 때문이었지 무슨 체계적인 사회인식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이 인간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고 격려해준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되었지요. (김문수, 1995, 나는 아직도 넥타이가 어색하다, 백산서당)

(조선일보) 불행한 현대사 극복 - 도시민의 삶 그려
윤홍길의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소설가 윤홍길씨는 한국인의 불행한 현대사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그 비극을 극복해온 한국인의 생명력을 그렸다. 국군과 인민군으로 나뉜 한 가족의 기막힌 사연을 그린 걸작 <장마>를 비롯, <에미>, <완장> 등의 장편이 그의 대표작이다.

그가 일급 작가로 문단에서 자리를 굳힌 것은 77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증편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발표하면서다. 당시 도시 주변부 하층민을 도시민적 지식인의 눈으로 그린 이 소설의 밑바닥에는 70년대 초 경기도 광주대단지에서 벌어졌던 주민과 경찰의 충돌 사건이 깔려있다.

소설 주인공 '권기용'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도시민이었다. 그러나 그는 광주 대단지에 어렵사리 땅을 구매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간부가 됐다가 시위 현장에 휩쓸린 뒤 '폭동사건'의 주모자로 낙인찍힌다.

이 소설은 그 '권'씨가 작중 화자인 교사 '나'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시작한다. '나'는 바로 경기도 성남에서 교사를 지냈던 작가 윤씨의 분신이다. '권'씨는 폭동주모자란 어머니마한 죄목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쫓겨나 하층민으로 전락한 뒤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열 켈레나 되는 구두를 버리지 않는다. 소설 끝에서 '권'씨가 집을 나가기 때문에 남은 구두는 아홉 켈레가 된다.

작가는 '나중에 서울로 이사해서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집 문간방에 세들어 산 사내가 구두를 많이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구두를 열심히 닦던 그사내의 인상적인 모습이 이 소설을 낳게 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1977년 한해 동안 역시 '권'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직선과 곡선>, <날개 또는 수갑>, <창백한 중년> 등을 연작 형태로 발표했고, 그 해말 소설집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문학과학지성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70년대 한국사회가 앓고 있던 계층간 단절을 도시민적 지식인의 기막힌 인생유전으로 그려 현실비판적 지식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작가 이문구씨는 '그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구두표보다 더 싼 소설집 '아홉 켈레의...'를 선물했던 탓에 금방 3판을 찍었다'면서 '1977년은 윤홍길의 해였다'고 말한 바 있다. (박해현 기자/ 조선일보/ 1997. 9. 30)

<자료 2) 관계당국 자료 >

단지개발 계획

① 단지개발의 목적과 성격

가. 단지사업은 도시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지 경영사업으로 실시한다.

나. 단지는 대단지화(최소 인구 20만명으로 설정)하고 주택도시로 개발한다.

다. 단지는 미개발된 지방(경기도 영내)으로 설정하되 수도권에 대한 위성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라. 단지에는 전기, 급수, 도로시설을 정비하여 개발촉진과 기능수행을 도모한다.

마.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단지 외의 인근 주민에게도 이용케 한다.

바. 단지는 최대한의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단지개발의 방침

가. 택지는 1가구(세대)당 20평~40평을 분양한다.(평균 30평)

나. 분양한 택지는 정착 후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에게 매도한다.

다. 주택건축은 입주자 자비로 건립하되 서울시에서 주택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라. 주민의 생활권 형성을 도모하여 경공업시설을 유치한다. 마. 주민 학령아(學齡兒) 대상으로 각급 교육기관을 유치한다.

바.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문화, 보건 및 시장시설을 유치한다.

사. 기타 지방발전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한다.

아. 단지 조성계획을 3차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인구 32만명 수용을 목표로 본 단지의 범위를 수진리(壽進里)를 중심으로 약 300만평을 확보하고 본 단지 성격에 따라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고 이에 필요한 도로, 시장, 공장 등 공공시설용지를 <그림 : 광주대단지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계획하였다.

④ 도시시설계획

본 단지를 서울시의 현재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위성도시 또는 주거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형성과 서울시와의 거리격차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생활권 형성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도로시설 등 기반적 도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가. 도로시설계획 단지 내 도로시설은 30m~12m의 가로망을 설치하여 도시 내 교통량을 처리하며 서울시와의 기존 연결도로를 보수 또는 확장하여 버스의 정류 운행과 장기적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철거된 전차를 유치하여 서울과의 교통인구 5,000명(학생 3,000명, 출근자 2,000명)을 수용토록 하였다.

나. 공공시설계획 공공시설은 주민입주에 따라서 생활권과 근린주구(近隣住區)의 형성에 맞추어 적정설치하고 이 중에서 상업·공업적 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기타 공적 시설은 서울시와 각 관계기관의 협조로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⑤ 단계별 개발계획

본 단지의 개발기간을 3개년(1968~1970)으로 책정함에 따라서 1차연도에는 도로, 하천개수 등 기반토목공사(基礎土木工事)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입주의 준비단계로 설정하고 실제 입주는 2차·3차연도에 받아들이기로 계획하였다.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1968. 5. 7 건설부장관 인가를 얻어 실시하여 온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광주대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대단지사업 일체를 인계인수한다.

1971. 10. 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경기도지사 김태경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광주대단지조성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사업의 인계인수)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사업을 71. 10 현재로 경기도지사에게 인계하고 경기도지사는 동 사업을 인수한다. 제2조(사업완성의 의무) 경기도지사는 서울특별시가 계획한 광주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조성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제3조(재산의 양여)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 안에 있는 일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경기도지사에게 양여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의무) (1)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경기도지사에게 지원한다. (2) 전항의 지원액은 72년도 분기별로 3차로 분담지원한다. 제5조(미수금의 처리) 인계인수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미회수한 조정금액은 경기도가 경수하여 이를 취득한다. 제6조(채무 등의 처리) 광주대단지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해결한다. 제7조(협조 의무) (1)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가 서울시의 생활권에 포함되므로 장차 확장될 천호동~광주대단지간 도로와 성남지역 도시계획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주대단지간의 신규도로를 서울특별시가 시계까지 조속히 개설확장한다. (2) 서울특별시는 택지, 상수도 등의 설계, 감독, 관리, 기술에 관한 현지인력을 사업 인계인수 후 향후 3개월간 계속하여 경기도에 협조토록 한다. (3) 서울특별시는 광주대단지까지의 시영버스를 계속 운행한다. 제8조(채류중인 소송처리)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 완성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 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일회)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내무부 및 건설부 관계관이 임회한다. 제10조(부책 등의 서류이관) 서울특별시장은 광주대단지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도서 및 일체의 부책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제11조(이건의 조정)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간에 재산의 인계인수 및 사업의 지원금액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부사항) 재산의 인계인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사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실무단에서 정한다. 협의각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간의 협약된 광주대단지사업을 인계인수함에 있어 협약서 제12조에 의거 실무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일체의 재산"의 한계는 서울특별시가 기투자한 38억원과 청소장비로 한다. 2. 제5조의 미회수금 중 가. 농어촌전화사업을 위하여 한전에 용자한 6,219만 1,000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기회회수하고, 미지출용자금 1,365만 5,961원은 상공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지원키로 한 5,00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한전에 용자한다. 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출한 5,000만원은 계속 서울특별시에서 회수하고 정부재정자금은 경기도에 이관관리한다. 3. 제6조의 채무 등의 처리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와 교환한 20,068평 중 미매수된 국유림 8,262평은 경기도가 광주대단지내 국유림 일괄 불하시 서울특별시가 대금을 지불 종결한다. 4. 제7조 2항에 규정된 현지인력 협조 범위는 제12조에 의거 조정한다. 5. 제8조에 규정된 채류중인 소송사건 중 공사금지 등 가처분사건 외에 본안 소송 2건은 서울특별시가 계속 수행하고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7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손정목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최병환 참고로 이때 서울시가 경기도에 이관한 재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산이관 총 1,366,600평 53억 5천만원 유보지 128,200평 25억 6천만원 (20,000원) 공장부지 233,000평 7억원 (3,000원) 공공용지 162,500평 4억 9천만원

(3,000원) 분양지 538,000평 10억 8천만원 (2,000원) 특혜지 151,200평 2억 2천만원 상수도 10,000t 2억 2천만원 기타 8천만원 2. 철거이주에 따른 비용부담 총 32,995세대 10억 2천만원 세대당 31,000원 매입비 7,000원 (20평 .350원) 정지비 24,000원 (20평 1,200원) 3. 총 지원액 총 63억 8천만원 1971 53억 5천만원(재산이관) 1972 4억 7천만원 1973 5억 6천만원]

광주대단지사업 <상>

서울 도심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번두리로 옮긴다는 정책에 따라 1950년대 후반부터 외곽지역 곳곳에 정착지라는 곳이 생겼다. 미아리.봉천동.신림동.사당동.시흥2동 등이 대표적인 초기 정착지다.

번두리 정착지마저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울시는 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근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현옥 시장은 67년 7월 18일 서울~의정부, 서울~광주, 서울~수원 구간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70년까지 3년간 약 10만5천가구(50만~60만명 수용 규모)를 짓겠다는 '광주대단지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탄리.창곡리.상대원리.북정리.단대리 등 일대 3백만평이 최종 부지로 결정됐다. 오늘날 성남의 탄생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땅 3백만평을 사들여 위성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주택단지 개발의 주요 방침은 ▶가구당 대지 면적 20~30평 ▶분양한 택지는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에게 매도 ▶주택 건설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 ▶경공업시설 유치 등이다.

시는 68년 초부터의 71년 8월까지 계획 면적 3백50만평의 55%에 해당하는 1백92만평을 매입했다. 69년 3월부터 택지 조성 공사를 벌여 1차로 수진리 50만평에 대한 정리작업과 간선도로 개설 및 하천 준설 등을 끝냈다. 71년 8월에는 모두 1백60만평의 택지가 조성됐다.

신도시 건설에는 택지만 아니라 최소한의 일터를 제공해 주는 공업단지가 필요하다. 모(母)도시인 서울과의 교통 소요시간도 한시간 이내로 줄이는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철도면 무허가 건물을 서둘러 철거해야 하는 규정들은 광주대단지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용산역 주변 철거민 3천3백가구가 69년 9월 1일 처음으로 광주대단지에 입주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20평씩 모두 6만6천20평을 분양했다. 이후 철도면 철거민뿐 아니라 일반 철거민도 속속 이주했다. 그런데 그들은 시에서 준 천막 조각으로 가건물을 지었다.

결과적으로 광주대단지사업은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다. 우선 경기도 관할 지역이다 보니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는 서울에서 너무 먼 곳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잉여노동력이었다.

광주대단지에 가던 뺨 땅값에 건축허가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입주권(딱지) 매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시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침입자'들이었다. 광주대단지에 입주하려던 철거민 중 상당수가 그들에게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갔다.

서울에서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면 직장도 가깝고 일거리도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이를 노린 부동산 중개업소가 광주대단지에 난립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입주권 값은

종로.중구 땅값과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다. 서울시 계획은 크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가 입주권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와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철거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1970년 7월 13일자 시 공고 제1백40호를 통해 입주권 전매를 규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입주권을 매입한 주민은 ▶토지 대금을 계약 당시 가격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고▶이 매매계약에 불응하는 자는 무단점용으로 간주해 퇴거 조치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서울시는 입주권 매입자에게 평당 8천원~1만6천원의 토지 대금을 물렸다. 입주권을 판 주민보다 4~5배 더 부과한 것이었다.

71년에는 대통령 선거(4월 27일), 국회의원 선거(5월 25일)가 있었다. 두 차례 선거에 나선 후보자.운동원들은 광주대단지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다. 광주대단지뿐 아니라 주변 땅값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땅값은 폭락했다.

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가옥 취독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에서 장관급인 공보실장을 지낸 전성천(全聖天)씨가 광주대단지에 제일교회(현 성남교회)를 세웠다. 그는 일제 때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광복 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신학대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이자 유명한 연설가였다.

전목사 주도로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가 결성됐다. 전목사가 고문, 박진하 장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대지 가격을 평당 1천5백원 이하로 인하▶불하가격 10년간 분할 상환▶5년간 각종 세금 면제▶구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경기도가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시정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광주대단지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다는 정보를 접한 서울시는 최중완 부시장을 현지에 보내 주민들을 설득토록 했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나는 양택식 시장을 모시고 약속 장소인 광주대단지 내 삼영전자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전성천 고문 등 10여명의 투쟁위원회 간부와 면담했다.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양측은 합의했다. 시장과 위원회 간부들 간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 성남출장소 뒷산에는 약 3만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 시민 쫓겨대회를 연다는 유인물이 뿌려져 있었다. 많은 주민의 손에는 플래카드.피켓과 함께 몽둥이도 들려 있었다. 양시장과 위원회 간부들이 면담 중인 것을 몰랐던 그들은 11시가 돼도 양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분노했다. 주민들은 1백50m 떨어진 성남출장소로 물러갔다. 차량이고 집기고 닦치는 대로 때려부쳤다. 출장소 직원 92명과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은 모두 달아났다. 난폭해진 주민들은 서류를 불태우고 도로로 나와 버스.택시.트럭을 때었다. 반항하는 운전기사들을 폭행했다. 주민들은 오후 5시20분쯤 흩어졌다. 이것이 '광주폭동'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는 1백36만6천여평의 대지(시가 53억5천만원)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넘겼다. 현금 10억원도 없이 주며 광주대단지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73년 7월 1일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했다.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정리=신혜경 전문기자

▣역사기행 - 8.10 광주대단지 사건

비가 내렸다. 1971년 8월 10일, 성남출장소 뒷산에 모인 성남 5만 여명의 주민은 누구의 지시받 것도 없이 성남출장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 삽, 낫이 들려 있었다. 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배고파 허기진 빈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사건 당시 제도권 언론이 난동, 폭동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일까. 당시 사건을 겪었던 주민들

은 자신의 존재가 밝혀지기를 것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하동근(성남문화연구소 53)소장은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방송, 지역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주민들을 수소문했지만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고 전한다. 하 소장의 말이 대변하듯 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시민에게조차 인식이 좋지 않아 지우고 싶은 이미지로 남아있다.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실이 전해져 역사의 재조명을 받아야 하는 시급한 실정이다.

회기에서 꼬박 1시간, 왕십리, 잠실, 복정 환승역만 3번을 거쳐 태평역에 도착했다. 택시로 갈아타 성남시청까지 가는 동안 본 성남시의 풍경은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었다. 곧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 좌우로 늘어선 고층빌딩들. 가난을 못 이겨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날의 현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의 시발점, 성남시청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당시 사건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였던 성남시청. 그 때는 광주군 성남출장소였다. 예나 지금이나 혁명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곳은 토지문서, 집문서, 등기문서 등이 있는 관청건물이다. 가난에 울고, 시당국의 숙임에 두 번 운 주민들이 집결한 곳은 성남출장소 뒷산이었다. "배가 고프고 못 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 내려달라"는 등 생존을 위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저마다 피켓, 몽둥이, 삽 등을 손에 든 주민 5만 여명은 그날 오전 11시 양택식 서울시장이 주민대표와의 면담약속을 어기자 산을 타고 내려와 성남출장소를 공격한다.

지금은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뒷산은 온데간데없고 아파트만 무심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기행을 도와준 하동근 소장은 "성남은 광주대단지 사건이후 모든 게 변했다"며 "그 때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상전벽해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성남이다"고 설명한다.

성남은 유난히 구릉이 많은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성남시청을 내려오니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 이곳은 숲이 많이 나서 이를 붙여진 탄천이 흐르던 곳인데 광주대단지 사건이후 도시건설 과정에서 복개됐다. 복개되기 전 아낙네들은 탄천에서 빨래도 하고 식수로 길러다 먹기도 했을 것이다. 더구나 하수도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던 광주대단지 주민들에게 탄천은 생명의 젓줄과도 같았을 것이다.

옛 탄천이 흘렀던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성남공영주차장이 눈에 띈다. 사건 당시 이곳에는 보건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미 한 차례의 전염병으로 홍역을 치른 주민들은 난리중에도 보건소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소는 현재 수정, 분당 보건소로 확대돼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기행을 도와주신 하동근 소장님의 설명으로만 어렴풋이 머리 속에 그려 볼 정도였다.

#철거민이 버려진 곳, 중앙로 일대

옛 탄천이 흘렀던 도로를 지나 다시 언덕을 넘어면 중앙로가 눈에 들어온다. 탄천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탄천이 흘렀지만 도시건설 과정에서 검은 아스팔트 아래 그 맥이 끊겨 버렸다. 이 중앙로 일대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중심이 됐던 첫 주민들이 이주된 곳이다. 여러 문서에서 주민들이 강제철거 돼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당국에 의해 청소차량에 실려와 쓰레기

처럼 버려졌다는 표현이 옳다. 1969년 5월 2일 밤중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려운

이들은 답십리를 거쳐 상계동까지 갔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주대단지로 떠밀려오게 된 것이다.

한 천막에 8가구나 딱딱따닥 모여 살았고, 30가구에 하나 꼴로 공동변소가 있었다하니 전염병이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주된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처음에는 포장마차로 연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포장마차를 하니 매상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건설일용노동직 등 일종을 팔려고 해도 서울로 갈 버스비 35원이 없어 실업상태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만 알아주는 이 만무했고 도리어 제도권 언론에 의해 난동으로 보도됐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난동으로 믿었다. 분당에 살고 있는 김성광 기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음 듣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문의 현장, 광주경찰서

시당국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22명의 평범한 주민을 반공법으로 묶어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다. 반공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든지 간첩이 되고, 간첩의 사주를 받은 범 죄자로 낙인 찍혔던 시대였다.

구속된 주민 22명은 광주경찰서에서 불펜 끼기 등 온갖 고통스런 고문을 당했다. 하동근 소장은 “당시 구속됐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간첩이 사주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 살려준다며 협박했다”며 “이는 간첩으로 몰아가 도시계획의 무모함 등 시당국의 책임을 가리려는 수작 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구속한 주민 22명에 대해 원래 파괴적이고 불만이 많아 이런 일을 저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정신이상자로 규정해 버린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살기 위해 소리 높여던 주민들에게 이 나라가 해 준 것은 배고픔 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그들을 정신이상자로 낙인 시켜버리는 잔혹함이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30여 년 전의 문혀버린 과거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늘의 자화상이다. 당시의 무모한 도시계획은 오늘날 성남의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한 제조명과 당시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때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969년 5월 2일,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한밤중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의 한 야산 지대에 트럭 몇 대가 멈춰 섰다. 서울시 청소용 차량인 이 트럭들은 뒤에 실린 물건들을 한 곳에 황급히 부려 놓고는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처음에 그것은 거대한 쓰레기더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곧 검은 유령처럼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름에 가린달이 허공에 등실 떠오르자 그것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것은 수십 명의 어른과 아이, 가계도구와 이불보따리, 식기와 곡식자루가 뒤섞인 그들의 남루한 세간이었다. 주변의 사물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곳이 ‘일자리 걱정 없는 신천지(新天地)’가 아니라 난방은커녕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집단수용소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렇게나 깎아놓은 울퉁불퉁한 노면에는 햇볕을 간신히 가릴 만한 대형 천막 몇 개가 설치돼 있었다. 어저할 바를 모르고 천막 주변을 서성이던 어른들은 한기에 잠이 깬 아이들이 울어대자 서둘러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황무지에서 새 삶을 개간해야 할 운명에 놓인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유형의 길을 떠난 수인(囚人)도 전쟁과 천재지변을 당한 피난

민도 나환자들도 아니었다. 서울 청계천변 무허가 판잣집에서 강제 철거당한 빈민들이었다. 인간의 땅’에서 추방된 이들 앞에는 ‘김승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1971년 8월 10일, 굶은비 내리는 경기도 성남출장소 뒷산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삼과 폭쟁이를 권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배가 고파 못살겠다.”

관공서가 불타고 경찰 지프가 하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민들의 폭동’이라 했다. 관제 언론은 이 분노의 시간을 ‘빛속의 난동 6시간’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몸부림, 허허벌판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무허가 인생’들의 인간 선언이었다

‘개발’이란 이름의 테러리즘

산이예요. 지금은 다 택지로 개발됐지만 전에는 한동안 예비군 훈련장으로도 쓰이기도 했던 곳이지요. 8?10사건 후 성남출장소가 계속 확대?개발되다가 1973년 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성남시청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분노의 표적이었던 성남출장소 건물은 간태없고 야드막한 야산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만 무심하게 있을 뿐이다. 청사를 등지고 대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성남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왔다. 도심의 풍경은 서울 주변의 여느 위성 도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대로, 그 좌우에 사열하듯 늘어선 고층 빌딩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했던가. 인구 100만을 거느린 거대 도시 성남 어느 곳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전벽해’란 말을 가장 잘 실감 할 수 있는 곳이 성남이예요.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모든 게 변했거든요. 하여간 남아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남한산성과 영장산을 두 축으로 하여 참나무?상수리 나무?오리나무들이 무성하게 군락을 이룬 산간 벽지였다. 주민들은 구릉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계단식 논을 부치거나, 솟을 구워 인근 송과장에 대다 팔았다. 그러던 1969년 3월 4일, 지금의 중앙시장 건너 산등성이에 수십 대의 불도저가 나타나고 캐터필러 땅음이 지축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평화도 깨졌다.

박정희 정권은 하천변에 거미줄처럼 퍼진 빈민굴이 ‘산업입국’, ‘수출입국’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골치 아픈 ‘무허가 삶’들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웠다. 외국 손님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안보의 사각계층인 빈민들의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곳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3백 50만 평 부지였다. 서울시는 이곳에 인구 50만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면서 택지 정지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고 수용시설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철거민들을 이주 시켰다. 신도시 건설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선입주 후건설’이었다.

“성남은 동에서 서쪽으로 구릉이 셋이 있어요. 이 구릉의 꺾질만 벗겨가지고 줄곳’이게 택지다.’한 거예요. 꺾질만 벗겼다는 건 당시 택지 개발을 맡았던 초석건설에서 나온 말이에요. 꺾질 벗길 돈밖에 안 받았는데 도로를 더 낮게 한다든가 땅을 더 판다는 건 상상 할수 없다는 거죠.”

빈민에 대한 국가 관리통제정책은 박정희 정권 때가 처음은 아니다. 1934년 경성부의 조선 시가지계획령은 세민지구라 하여 경성의 하천변이나 임야를 무단 점거한 토막민(土莫民)을

도시 내부에 분산 수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토막민 주거지를 일반 주거지와 분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배제 정책이지만 추방과 외곽에서의 집단 수용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권의 야만적인 빈민 정책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태가 있었다.

경영행정이라는 미명하에 월값에 매입한 땅을 고가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도 이 주민들이 처한 고통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박정희 정권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테러리즘에 다를 아니었다. 오죽하면, 성남시에서 펴낸 『성남시사』조차도 성남의 건설 과정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패작 신도시 건설'이라고 백하고 있을까.

죽음을 부르는 '빈곤의 현장'

어느 새 길은 수정로로 이어졌다. 이 길은 복개되기 전까지 탄천의 지류인 독정천이 흐르던 곳으로 8710 사건 당시 성남 주민들이 경찰 지프차를 밀어서 떨어뜨렸던 역사의 현장이다. 가수용 시설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 탄천은 생명의 젓줄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식수를 길어다 먹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용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공동변소와 펌프가 30가구에 하나 풀이었으니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죠. 급하면 개천가에 용변을 보고 또 그 물을 식수로 길러 먹고……. 천막 하나에 여섯 가구, 여덟 가구 한꺼번에 들어가서 캐비넷 같은 걸로 파티션을 하고 살았으니, 그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것이었어요. 1970년 봄에는 전염병까지 돌아서 완전히 아수라장인데도 철로변이나 하천변 철거민을 태운 트럭은 꾸역꾸역 한강을 넘어오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두 시간마다 다니는 버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릴 때 창문으로 기어나가거나 뛰어내리다 보니 온전한 유리창이 하나도 없죠. 그 복새통에 아이가 깔려죽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어요. 일차리도 없죠. 서울에서 날뎠팔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허허벌판에서 뭘 하겠어요? 굶고 술 먹고 싸우는 일밖에는 할 게 없었던 거죠. 성남 초기의 삼다(三多)가 뭔지 아세요? 술집, 교회, 여관이예요."

또 하나, 많은 것이 있었다. 복덕방. 1969년 가을부터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분양중 전매행위가 극에 달했다. 경기는 과열되고 전입자가 폭증했다. 1971년 8710 사건 직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대단지 인구 12만 명 중 전입자 수는 철거민의 1.6배에 달했다. 더욱이 1971년 4월과 5월의 선거는 많은 공약을 남발했고 그것은 빈민들을 대단지로 유혹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가 분양 토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면서 개발붐도 사그라들었다.

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단지에 남은 것은 혹독한 굶주림이었다. 주민의 80%가 실업자였고 서울에 나가 날뎠을 팔려고 해도 버스비 35원이 없어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았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산모가 먹을 게 없어서 아기들 살아 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 정도로 그 당시 생활상은 비참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신흥동 팔각정 터로 향했다. 팔각정이 있던 자리엔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섰지만, 이곳은 당시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놀이 공간,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고 한다.

"이 팔각정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단지 내에 문화 공간이라 할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극장이나 다방이 있다 해도 돈 들고 또 그 형편에 차를 마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구공 꼭대기에 정자를 지은 거 같아요. 초기 가수용 시설이 다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땐 주변에 집이 없어서 팔각정이 아주 도드라져서 단지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유용한 공간이었어요. 산모 관련 소문이 있었던 집도 바로 이 옆이었고요. 그 전 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최극빈층이 모여 살았던 '빈곤의 현장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동근 씨가 이끄는 대로 연립주택들이 성냥갑처럼 늘어선 비탈길을 타고 내려갔다.

경사가 어찌나 가파른지 맨 꼭대기까지 오르면 정말 '달'에 닿을 것만 같은 달동네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이간 곳은 분당선 태평역 근처에 있는 성남교회. 1970년 11월부터 광주대단지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했던 곳이다. "1973년 성남에 들어온 주민교회와 방식은 다르지만 이 교회 전성천 목사도 나름대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죠. 단지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양반이 다 알아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이 죽기만 하면 교회 앞에 시체를 두고 가는 거예요. 많을 때는 20구를 처리하기도 했대요. 교통경찰 했던 분한테 들은 얘인데, 당시 주 업무가 시체 치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던 거죠."

불타는 광주대단지

1971년 7월 14일, 서울시는 일체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주민들에게 '분양 토지 20평을 평당 8,000~1만 6천 원씩에 불하하고 대금은 일시불로 7월 말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경악한 주민들은 서둘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당국에 '대지 가격 평당 1,500원 이하, 대금 10년 연부 상환, 각종 세금 면제, 영세민의 취로 알선과 구호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회신이 없었다. 대책위원회는 곧 투쟁위원회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모이자, 뭉치자, 쫓기자, 시정 대열에'라는 전단이 뿌려졌다. 8월 10일, 여름비가 질척하게 내리는 날이었다. 성남출장소 뒷산에는 새벽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그들은 '살인적 불하가격 걸사반대', '백 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차극 말라.', '공약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머리 위까지 치켜들었다.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전 11시에는 양택식 서울시 장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시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11시 45분을 넘기면서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자!"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로, 성남 군중들은 성남출장소로 몰려갔다. 곧 연기와 함께 불길의 치솟아 올랐다.

출장소 옆 관용 지프도 불타다. 버스나 트럭을 탈 취한 주민들이 대단지를 누비는 동안 진화 작업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긴급 출동한 경찰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기동경찰과 투석전이 벌어 지고 광주경찰서 성남지서?순찰차?수진리 남문주유소가 불타는 등 빙속에서 쫓고 쫓기는 난투극은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 서울 시장의 '요구 조건 무조건 수용'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항거는 계속되었다.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하고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그 날의 시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주민 22명이 구속된 그 날의 투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당국은 구속된 22명의 주민을 반공법으로 묶어 간첩이나 정신이상자로 몰았다. 그들은 풀려난 뒤에도 보안관찰을 당했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답은 '난동'이라는 데서 딱 멈춰 버렸어요. 성남 주민들도 이 문제 들춰내 봐야 동네 이미지만 버린다,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 라고 생각하죠. 물론 최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제조명되지 않는 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주동자로 찍혀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성을 빨리 찾아줘야 폐인처럼 숨어 지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를 성남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리가 없다. 사건이 재조명되고 당시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근대화 역사는 고장 난 시계처럼 영원히 '야만'의 초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

사진. 황석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 본업은 따로 있지만 요새는 부업으로 이런 저런 취재도 하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 요새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다보니 꼭소리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야. 그렇게 지내던 중 용산살인진압 사건이 터지고, 그계 계기가 되어서 전철연 아저씨 아줌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지.

전철연을 보고 보상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위꾼들이다. 도심테러범들이다... 말이 많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진압 당해서 죽어도 억울할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운연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 내 생각을 말하자면,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 다섯 분들이 지금 사건이 발생한지 20일이 되기도록 장례도 못 지내고 억울한 영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내가 만난 분들은 성남 단대동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상가 세입자로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야. 이번 용산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매우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시지. 난 평범하게 빵집을 하던 아저씨와, 미장원을 하시던 아줌마들이 어찌다가 재개발에 맞서 싸우게 되고, 전철연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전철연은 좌빨이다 시위꾼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난 그렇게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가지미 같은 인간들까지 눈알 위치 좀 돌아오게 만들 자신은 없네.

1. 성남시의 특징

성남이 시로 승격이 되기 전까지는 '광주 대단지'라고 불리었는데, 서울에서 밀려난 하층민들이 몰려서 살던 거대한 달동네같은 곳이었어. 지금은 한 구역전체가 다세대주택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곳이 많지.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도 좀 있지만, 오랫동안 성남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많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야. 우리 집도 어렸을 때 성남에서 몇 년간 살았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성남시의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고 '서로 뜯어 먹으며 산다' 라고 나쁘게 말하시지만, 내가 어렸을 때 살아본 기억으로는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끼리도 잘 알고 지내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 살면서 생긴 동네 문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애.

그런데 2000년 서울에서 시작된 뉴타운 재개발의 열풍이.... 서서히 성남시에도 불어 닥치

기 시작했지. 좁은 다세대주택촌을 넓고 깨끗한 아파트촌으로! 땅 값도 오르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니 일석이조! 말은 좋지... 작년 총선 때도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서 한나라당을 찍었잖아. 성남시에도 그 많은 다세대주택들을 다 없애고 모두 아파트촌으로 바꾸자~ 는 계획이 시정차원에서 계획되어서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었어. 그래서 첫 번째 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곳이 수정구 단대동 지구야.

2. 재개발 추진과정의 문제점

우리 나라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자의 2/3이 찬성하고 세입자의 1/2 이상이 찬성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단 세입자가 가구수의 1/2 이하일 경우 무시 가능)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건 소유권자 1/3의 의견, 그리고 세입자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는 건데, 뒤 법은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남 단대 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오던데라 토지소유권자의 1/3은 서울 사람, 1/5는 국공유지/ 나머지 1/2 정도가 지역 주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반 수 이상이 반대를 해도 재개발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이쯤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한다는 건 좀 패이크성이라는 게 슬슬 보이는 데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 처자....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도 시공사가 이윤을 극도로 뽑아내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을 하게 되. 그러면 예전의 다세대주택들 보다 가구수가 줄어들게 되. 원주민들이 필연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태야. 그리고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 그래서 원주민 입주율이 20%쯤밖에 안 되는거야. 그나마 입주한 원주민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고 얼마 못 버티고 이사를 간다는군.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와고 알면서 지내던 동네 문화가 아예 무너지는 건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3. 주거 세입자들의 문제

지금까지 집주인들이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직 세입자들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_-;; 우리나라도 재개발의 역사가 꽤 되고, 많은 빈민들과 세입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 끝에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긴 해. 세입자들의 경우 재개발한다고 다 쫓겨나는 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청약권을 따기도 하고, 아니면 재개발을 하는 동안 임시거주단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장 받기도 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긴 해... 그런데 이것들은 나라에서 반드시 보장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권고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사업진행이 되기 전 단계에 저런 논의가 다 끝나있어야 되. 그런데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공무원들이나 개발 이익을 뽑아 내려는 업자들은 저런거에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지.... 그래서 보통 세입자들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도 저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결국 집주인이 방 빼라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단 공공 주도의 재개발일 경우 3개월의 생활비와 이주비가 지원이 되긴 하는군....

4. 더 심각한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 세입자들보다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주거 세입자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생활터전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까지 잃어 버리기 때문이다.

상가 세입자들도 재개발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는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어. 그런데 아까 주거 세입자들의 경우처럼 그런 요구를 사업 추진이 시작될 때부터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라.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을 듣고야 사업이 진행되는걸 알고 재개발이 확정된 후에는 이미 늦은거지.

결국 재개발이 확정 되면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새로 만드는 상가에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갈래. 그런데 전자는 상가의 수가 적을 뿐더러 대금도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은 후자를 선택하게 되. 다른 곳으로 나가서 장사를 계속 하는 수 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 점포를 얻는다면 또 권리금을 내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 권리금이야 원래 보장받는 돈이 아니다 치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래 영업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터를 잡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고,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거야. 그런 보상은 아무도 안 해줘.

자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치자.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의 문제가 남아. 주거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상가 세입자들도 3개월의 영업비와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 과정이 또 엄청 문제가 많아. 아예 사업 단계부터 전체 보상액이 정해져있고 감경가가 그 보상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비와 이전비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때가 있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형평성조차도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거지. 의자나 책상이나 좀 옮기면 끝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전비는 1억이 넘게 나오는데, 아예 모든 진열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슈퍼마켓의 경우는 700만원쯤 나온단던지.... (그분들은 아마 변호사는 건드리면 안 좋기 때문일거라고 추측함) 이런 식으로 영업비와 이전비마저 뽀빠이 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턱 없이 모자라는 영업비와 이전비, 그리고 새로운 점포의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게 되. 되도록이면 삶의 터전이었던 성남시를 벗어나지 않고 싶어하지만 성남시의 다른 곳도 다 재개발 사업이 계획중이라 마땅치가 않게 되버려. 어떤 분은 이 문제에 대해 시청에 항의를 했더니 직원이 말하길 '지방에 내려가서 장사하시던 되잖아요' 라고 했다더군.

5. 용역 쟁패와의 전쟁

떠날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사람들은 남고... 이때부터 남은 사람들은

철거 용역들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

우리 나라 법에 적혀 있길, 행정대집행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용역은 절대 세입자들을 무력으로 퇴거할 수 없고, 용역들은 허가된 경비업체에 한해서만 호신용 단봉과 소형 소화기를 소지할 수 있어. 전자는 결과가 남으니까 법이 잘 지켜지지만, 후자는 증거가 잘 안 남기 때문에 잘 안 지켜져. 용역들은 싸움이 시작되면 카메라부터 부순다는군.

용역들의 목적은 빨리 남은 세입자들이 나가도록 압력을 넣어서 공사를 앞당기는 거지. 온갖 영업 방해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세입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빈번해. 건설업자들에 의해 고용된 다수의 건강안 남자들로 이루어진 용역들과, 나이 드시고 인원 수도 몇 안 되는 상가세입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일방적인 싸움이겠지. 그리고 세입자들이 폭력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항상 늦게 출동해. 때로는 출동해도 한 두 명 뿐인 경찰들이 다수의 용역들이 세입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을 그냥 멀뚱멀뚱히 쳐다보기만 할 때도 있어.

장패들은 때려요, 경찰들은 가만히 있어요, 구청은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쯤 되면 세입자들은 이 나라에 자신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는 없다는 걸 알게 되.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 중 한 단체가 '전국철거민연합'이야.

6. 왜 망루를 짓고 화염병과 새총을 쏘는가

예로부터 철거민 시위는 가장 과격한 방법을 쓰는 걸로 유명했어. 생계와 주거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는 철거민들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역들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 농성이나 시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농성이나 시위가 알려지기도 전에 용역장패들이 덮쳐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드는 용역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방법이 뭘까? 망루를 쌓고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 하도록 화염병과 새총을 쏘아 왔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화염병을 던지면 100%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처벌을 각오해야해. 그 사실을 철거민들이 모를까?

꼭 그렇게까지 농성이나 시위를 해야 되냐고 물을 수도 있고, 전철연의 투쟁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철거민 문제를 접근하는 곳들도 있어. 그러나 망루를 쌓고 화염병을 던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전철연이 주도한 싸움 중 망루를 쌓지 않고 투쟁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 더 많다고 해.

전철연에게 시위꾼과 좌빨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나 내가 알기로 전철연은 의장이 한달에 월급을 50만원 받는 영세한 조직이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서로 처지가 비슷한 철거민들이라 서로의 시위에 동참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 철거민들의 요구는 대부분 다음과 같아. '현실적인 보상비를 달라', '임시로 거주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 '용역장패들을 처벌하라' 지금까지 철거민들의 정황을 보는데,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전철연이 보상을 노린 시위꾼들이라는데 그들이 보상금을 얼마 더 받든,

수입일 동안 몇 백명의 용역을 동원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수익금보다 더 받을까? 그들이 반국가 좌빨이라고 하는데(87년에 만든 조직이라 옛날 해방전쟁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령이 좀 있음) 설마 화염병 몇 개와 새총으로 국가전복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바보짓.

7. 경찰은 왜 무리한 진압을 했는가

일단 화염병이 등장하면 경찰은 반드시 개입해. 이번 용산참사에서 경찰은 농성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자동차에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져서 어쩔 수 없이 경찰특공대로 발효했는데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졌지. 그들이 공개한 화염병 던지는 영상은 작전 중에 벌어진 일, 즉 차량통제와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고 결국 철거민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진 일이 없는 거야. 아마 용역장패들에게 던진거겠지. 앞서 말했듯이 화염병은 당투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위협을 가하는 목적이고, 그 당시 용역들은 농성자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도록 페타이어를 아래서 태워 연기를 올려보냈는데 경찰이 용역은 하나도 제지를 안 했군. 싸움을 말려야 하는게 본디 경찰의 의무일텐데 용역이랑 경찰이 같이 농성자들을 공격한 꼴이 되어 버렸잖아. 경찰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망루를 공격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망루안에서 발생하여 모여있던 신나가 폭발했어.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 부상은 약 30명.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어.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걸까? 당연히 경찰은 농성자들에게 있다고 하고 농성자들은 경찰에게 있다고 하겠지.

농성자들이 진압 과정에서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전에도 몇 번이나 그런 대치가 벌어졌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참사로 번지지 않는 않았어. 경찰은 시간을 두고 농성자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 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작전을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했어. 농성자들에게도 그건 예상할 수 있었던 결말이었던거야. 다만 망루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동안은 언론이 취재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졌을테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 내 말의 요지는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경찰은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난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봐. 이전의 경찰과 달라진 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농성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진압했다.(시위가 장기화 될까봐 조기진압했다는 경찰 브리핑도 있음) 그리고 급하게 진압 하다보니, 계획 수립과 작전 과정에 미스가 있었고(신나에 불이 붙었는데 물대포를 쏘는 미친 짓 등등) 안전 장치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 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1.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 2. 용산재개발 사업에는 대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이 걸려있었다. 3.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좋아하며, 시위를 싫어한다.

정리하자면, 대기업들의 이윤도 엄청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약자들이 시위를 통해 뭘 좀 해보려는 걸 싫어하고, 이제 막 경찰청장도 되었다 싶어서 좀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했는데 완전 실패로 돌아간거지. 이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경찰이 져야 맞는거야. 그러나 앞으로 경찰의 책임은 막중하기 때문에(앞으로 모든 시위를 신속하게 진압해야 할테니까) 뒷대다리들이 보기에 경찰이 벌써 망가지면 안 되. 그럼 누구의 책임이지? 도심에서 화염병을 든 철거민 때문으로 돌리는 거지... 어이 그렇다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모르셨군요. 빨갱이와 시위꾼들은 좀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과 보수언론은 여론을 그렇게 몰아갔고, 그 말에 동의하는 물지각한 사람들이 좀 있어.

8. 철거민 문제는 중산층 문제?

지금까지 이야기 했지만, 내가 만나본 단대동 상가 세입자 아저씨 아줌마들은,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빵집 아저씨, 미용실 주인이었어. 시위 같은 건 평생 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가게일만 해오던 사장님들이야. 그런데 재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관리들이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설회사는 돈으로 용역을 사서 그들을 괴롭히고, 경찰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그 분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 철대위 사무소 한 쪽에는 큰 글씨로 여러가지 구호들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가 적혀있었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노래 가사가 익숙치 않아서 외우기 위해 일부러 적어 놓은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한 아저씨는 전철연 집회에 나가다 보면 구호나 강령 중에 좀 요새 실정이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대. 뭐냐하면 전철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철거민 운동은 일종의 빈민운동이었는데 자신은 달동네에 살거나 집이 없는 하층은 아니라는거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가게도 있고 직원도 고용하는 중산층이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고 나니 순식간에 소득이 없어지면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거야. 다른 곳에 점포를 내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새 은행 융자받기는 쉬운가? 더군다나 아저씨의 자식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세가 기울어져버리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난이 되돌림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듯 했어.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원주민 입주율이 20%도 안 된다는 그 뉴타운 지역의 그 아파트들을 생각했어. 나름대로 자기 집이 있었던 80%의 원주민들은 더 좁고 낙후한 지역으로 이사를 갔겠지. 어쩌면 내집살이에서 전세살이의 처지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자리에 분양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우리 나라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백명 중 일곱 명인데 그들이 전체 30%의 집을 가지고 있고, 평균 가지고 있는 집이 다섯 채라고 하는군. 뉴타운되면 서민들은 땅 값도 오르고 잘 살게 된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완전히 눈뜨고 코베이는 격 아니야.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전 말도 안 된다고 시위를 한다면.... 경찰특공대가 진압하겠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위꾼이 죽었네 좌빨이 죽었네 하겠지.

뉴타운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특히 이명박 정부는 건설부 양상을 경제 위기 극복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땅값이 오르네 땅을 사야되네 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런 땅은 이미 부자들이 다 차지한 후일거고 부자들은 아마 그렇게 번 돈으로 당

신이 가지고 있는 땅도 사들일걸.... 그렇게 우리나라는 1% 부자들의 천국과 99% 빈자들의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남미형 경제가 되어버리는거야.

혹시 지금의 땅값 거품을 결국 국민경제가 감당 못해서 부동산 폭락사태가 온다면? 그렇다면 10년째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처럼 되겠지.... 중남미로 가느냐 장기공황으로 가느냐... 어느쪽의 선택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일 수가 없어. 이런 와중에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를 억압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 바로 지금 용산참사를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제9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발행일 : 2004. 12. 1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4. 12. 1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내 용

-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 서울시의 입장에서'
- 허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